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홍 석 룰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0년대 중반 진보적 여성단체의
연대활동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김 인 혜

1980년대 중반 진보적 여성단체의
연대활동

홍 석 료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김 인 혜

인 준 서

김인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5월

심사위원장.....(인)

심 사 위 원.....(인)

심 사 위 원.....(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1950~60년대 여성단체들은 대다수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성격을 띠며 국가권력에 예속되어 있었다. 이들은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독재체제를 옹호하는 등 철저하게 정권에 종속되어 있었다. 1970년대 중반 세계적으로 여성주의 운동이 활성화되고,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증가하며,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중간집단 교육 등이 진행되자 여성운동에도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다. 특히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중간집단 교육은 ‘여성의 인간화’를 골자로 한 교육을 통해 여성운동을 이끌 중간집단을 육성하고자 했으며, 1980년대 새로운 여성운동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1983년 전두환 정부가 유화조치를 취하자, 시민운동과 민주화운동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여성운동 역시 여성주의를 본격적으로 내세우는 단체들이 등장했다. 1983년 ‘여성의전화’, ‘여성평우회’가 연달아 창립되고 1984년에는 ‘민주화청년연합 여성부’가 신설되었다. 이들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대중적 여성운동으로 합법단체를 지향했다.

1980년대 독재정권 하에서 성폭력은 빈번했으나 여기에 대한 대응은 미미했다. 1984년 경찰의 여대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각 학교의 여학생회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고, 여기에 여성단체들이 개입하여 공권력의 성폭력에 연대활동으로 대응하였다. 진보적 여성연합체였던 ‘여대생추행사건 대책협의회’는 비록 눈에 띄는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여성 연대의 시발점이 되었다.

진보적 여성단체는 지속적인 대중여성운동을 위해 기층여성은 물론 중산층 여성의 지지를 획득할 필요가 있었다. 1985년 성도섬유 해고사건은 소비대중이 직접 운동에 참여하는 불매운동의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같은 해 사회적으로 쟁점화 된 여성 조기정년문제는 사회에 만연해있던 직장 내 여성 불평등 문제를 개선했다. 두 사건에서 연대했던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노동권 획득이 우선적 과제라는데 동의함으로써 ‘여성생존권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며 성차별적 제도에 지속적으로 저항하고자 했다.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발생은 진보적 여성단체들이 연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권인숙의 폭로는 공권력의 정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미 연대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여성단체들은 기민하게 대응했고, 민주화세력이나 재야운동권, 종교계를 포함한 ‘부천경찰서 성고문 공동대책위원회’라는 범 민주화운동 세력의 연대를 형성하는 주축이 되었다.

여성운동은 공권력의 성폭행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주화운동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민주화운동과 여성운동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1985년 학원안정법 도입을 계기로 나타났다. 국가로부터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내세우며 창립한 진보적 여성단체들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어떻게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유지할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진보적 여성단체 내부에서 진행된 논쟁들은 민주화 운동과 여성운동의 관계를 어떻게 위치시키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는 ‘여성주의에 입각한 민주화’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촉발하는 동기가 되었다. 여성단체의 논쟁과 지속적인 연대의 경험은 1987년 2월 진보적 여성단체의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탄생으로 귀결되며 민주화 이후 여성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머리말	1
II. 진보적 여성단체의 결성	
1. 1970년대 중반 여성운동의 변화	5
2. 1980년대 중반 진보적 여성단체의 등장	9
III. 진보적 여성단체의 연대활동	
1. 경찰에 의한 여대생 성추행 사건과 여성단체의 대응	15
2. 여성노동자의 권리확보를 위한 연대	20
3. 부천시 성고문 사건과 민주화운동 세력과의 연대	27
IV. 여성운동의 정체성과 민주화운동	
1. 성폭행 문제에 대처하는 시각의 차이	35
2.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관계에 대한 논쟁	41
V. 맺음말	48

참고문헌

ABSTRACT

I. 머리말

1950~60년대에는 ‘대한부인회’와 ‘한국여성연합회’ 등 여성단체들이 나름대로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당시 여성단체는 국가권력에 재정적으로 의존하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 반관반민(半官半民)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유신체제기에 적극적으로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등 한계를 보였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국가권력 종속적이었던 기존 여성운동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성운동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산업화로 인한 여성노동운동의 확대와 맥락을 같이 했다. 동시에 세계적 여성주의 기조의 확대, 1974년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중간집단 교육론이 대두되며 여성운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단체는 국가정책에 동원되거나 사적영역에서 여성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다루는 등 활동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1970년대 후반 기존 여성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는 1980년대 ‘진보적 여성단체’의 성립과 활동으로 이어진다.

1980년대 여성운동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진보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일반적인 이념적, 정치적 맥락보다는 여성운동의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이들은 해방이후 주류를 이루었던 보수적이고 반관반민적인 여성단체와 구별되는 독립성과 여성주의 이념을 내세웠다. 국가·남성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여성해방이념을 내세웠고,¹⁾ 전체사회의 변혁과 여성해방의 전략을 결합시키려고 노력했다.²⁾ 1983년 ‘여성의전화’, ‘여성평우회’ 창립, 1984년 ‘민주화청년연합 여성부’ 신설은 여성운동의 독자성과 진보성을 강조하는 일련

1) 장민혜, 「한국 여성주의 문화운동의 성장과 특성에 관한 연구: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2) 김기선미, 「'진보적 여성운동'의 전망」, 『한국현대여성사』, 2004, 326쪽.

의 흐름을 형성했다. 1980년대 여성단체는 여성에게 가해진 차별적·억압적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으며 이전의 반민중적 성격을 탈피해 민중적 여성운동으로서 질적 전환을 하였다.³⁾ 이러한 의미에서 1980년대 여성단체는 ‘진보적’이라 할 수 있다.

진보적 여성단체는 1984년 11월 경찰의 여대생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에 집단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했고, 1985년 여성노동자의 권리투쟁을 통해 연대의 범위를 확장했다. 그리고 1986년 6월 ‘부천시 성고문 사건’이 발생하자 국가권력의 성폭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세력과 본격적인 연대를 이루었다.

1980년대 중반은 전두환 정권과 민주화운동진영이 치열하게 대립했던 시기였다. 진보적 여성단체가 여성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으로 연대하면서, 당면한 민주화를 위한 정치투쟁에 여성운동의 역량을 어디까지 할당할 지 논쟁이 발생했다.⁴⁾ 군부독재 하에서 진보적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지키면서 민주화운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본 논문은 민주화 이후 여성운동의 방향설정에 있어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되는 1980년대 중반 여성단체들의 연대 활동을 살펴보고 한다. 여성단체들의 연대가 확대되면서 민주화운동 내에서 어떻게 주체적인 위치를 갖게 되는지, 또 어떤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지 일련의 상관관계를 해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진보적 여성단체들이 반(反)성폭력운동의 일환으로 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여대생추행사건 대책협의회’, ‘부천경찰서 성고문 공동대책위원회’ 등의 활동에 주목한다. 또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3)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여성분과, 「80년대 여성운동자 90년대 여성운동의 전망(1)」, 『정세연구』 9, 1990, 106쪽; 이승희, 「인간해방·여성해방을 향한 80년대 여성운동」, 『한국사회운동사』, 한울, 1990, 289쪽.

4) 신상숙, 「한국 반(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와 자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98쪽.

있었던 여성노동자문제와 여성생존권투쟁도 분석하려고 한다.

1980년대 여성단체를 다룬 연구들은 이 시기 여성단체의 가장 큰 특징이 ‘진보성’이라고 지적한다.⁵⁾ 여기에 주목하여 1980년대 중반 창립된 여성단체의 형성과정과 활동을 다룬 연구로 이승희, 박인혜, 신상숙, 김영정 등이 있다. 이승희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특성을 민중성에 두고 ‘여성평우회’의 창립부터 해소까지 이르는 과정을 다루었으며⁶⁾ 박인혜는 ‘여성의전화’의 운동과정을 통해 여성단체의 주체의식 변화를 다루었다.⁷⁾ 신상숙의 경우, 반(反)성폭력 운동을 중심으로 1980년대 진보적 여성단체의 대응 및 민주화 이후의 영향력에 주목했다.⁸⁾ 김영정은 1980년대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그 상호작용을 항목별로 강조했다.⁹⁾

기존 연구들은 여성단체 자체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진보적 여성단체의 연대활동이나, 여성운동이 민주화운동과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여성단체 내부논쟁의 경우 대부분 급진적 사회주의 이념논쟁에만 초점을 맞추어¹⁰⁾ 민주화운동 내에서의 여성운동 위치 논쟁은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신상숙·박인혜는 여성단체 내부 논쟁과 연대과정을 일부 다루었고, 김영정은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관계를 지적하긴 하였지만 자료의 한계로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5) 강남식, 「한국 여성운동의 흐름과 쟁점」, 『기억과 전망』 7, 2004; 김기선미, 앞의 글; 김영정, 「1980년대 한국 여성운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민주화운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박인혜, 「1980년대 한국의 ‘새로운’ 여성운동의 주체 형성 요인 연구: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여성의 인간화’ 담론과 ‘여성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5호, 2009; 윤정숙, 「‘진보적’ 여성운동의 전환을 위한 모색」, 『창작과 비평』 32, 2004; 이승희, 『한국현대여성운동사』, 백산서당, 1994; 서미라,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와 ‘진보적’ 여성운동의 제도화-〈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6) 이승희, 앞의 글.

7) 박인혜, 「‘여성인권운동’의 프레임과 주체 변화에 대한 연구: 〈여성의전화〉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8) 신상숙, 앞의 글.

9) 김영정, 앞의 글.

10) 장민혜, 「한국 여성주의 문화운동의 성장과 특성에 관한 연구: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박인혜, 앞의 글, 2004; 강남식, 앞의 글.

이 논문에서는 각 사건 별 연대활동이 전개되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보려고 한다. 이에 각 시기별 여성연합체의 성명서와 활동과정을 담은 보고서, 문건 등을 활용하고, 또한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당대의 신문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1980년대 진보적 여성단체의 활동과 내부 논쟁을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1980년대 중반 대표적인 여성단체의 기관지 『여성평우』(여성평우회), 『베틀』(여성의전화)을 활용하고, 당시 진보적 여성단체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채록된 구술 자료를 통해 당시 여성운동의 고민과 역동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한편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 세력과의 연대를 다른 측면에서 조명하기 위해 『해방』, 『석순』 등 대학 내 총여학생회의 회보, 『민주화의 길』 등의 민주운동단체의 기관지 등도 함께 활용하였다.

Ⅱ. 진보적 여성단체의 결성

1. 1970년대 중반 여성운동의 변화

1949년 2월 창설된 ‘대한부인회’는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반관반민(半官半民) 단체로, 국가정책에 동원되어 활동했다는 점에서¹¹⁾ 국가에 종속된 측면이 있었다. 다양한 여성단체들은 1959년 12월 16일 김활란을 회장으로 한 8개 여성단체들의 협의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¹²⁾을 창립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여성단체들은 인간적이며 여성적인 교양 및 자질향상, 회원의 상호친목과 복리, 그리고 국가사회를 위한 봉사를 활동의 중점으로 두었기 때문에 사회 현실과 유리되고 대중의 이해관계에 부응하지 못했다.¹³⁾

1970년대 들어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1972년 유신체제가 수립될 때 여협은 「10월 유신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글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유신 과업 완수하자” 등의 구호를 내걸었으며, 유신체제를 지지하는 글을 신기도 했다.

(10월 유신에의; 필자) 그 진취적 참여는 곧 유신과업의 시발과 종장을 뜻깊게 기록할 것이다. 나라의 가장 큰 저력이 피어나 민주적 통일과 평화와 발전의 언덕을 이루고 고동하는 기세의 모집단이 될 것이다. 많은 여성단체와 그 멤버들이 그의 향도이자 전위자이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¹⁴⁾

11) 과도한 정치동원의 문제를 제외하면 40~50년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논의 및 활동은 60년대에 비해 더 활발했다는 평가도 있다. 미군정 하의 리버럴한 분위기나 이승만 독재체제의 지배 메카니즘이 아직 완전히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현백, 앞의 글, 2006.)

12)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는 대한여학사협회, 대한어머니회, 대한YWCA연합회,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 대한부인회, 여성문제연구회, 학생문제상담소, 한양여성클럽 등이 있었다.

13) 정충량·이효재, 「여성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4, 1969, 58쪽; 1977년의 조사에 따르면 57개 여성단체 중 회원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24개이며, 직업기능별 단체는 8개, 여성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5개에 불과하다. [김의순·임미령, 『한국여성단체 활동의 현황과 문제점』, 여성문제연구회, 1977.(이승희, 앞의 글, 1990 재인용)]

여협은 독재체제를 방관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유신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는 등 당시의 민주화세력과는 정반대의 노선을 유지했다.

반면 1970년대는 세계적으로 여성운동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이기도 했다. UN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는 한편, 같은 해 멕시코 세계여성회의에서는 ‘세계여성 행동강령’을 채택했다.¹⁵⁾ 여성주의 운동이 대두되는 국제적 동향에 우리나라 역시 영향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26일 ‘세계여성의 해 행동강령추진위원회’가 여협 내에 조직되었다. 더불어 1977년 이화여대에 여성학과가 신설됨으로써 여성학 연구의 거점이 되었다.

여성주의의 확산은 1974년 2월 6일 설립된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중간매개 집단 육성강화 교육’(이하 중간집단 교육)에서도 찾을 수 있다. 종교단체는 독재정권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1960년대 활동 초기부터 여성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여성을 주제로 한 대화모임을 진행하면서 중간집단 교육이라는 아카데미의 독자적인 전략을 구상해 왔다.¹⁶⁾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중간집단 교육은 “한국사회의 제반 양극화현상 해소에 기여하고 민주화(자유)와 사회정의(평등)에 입각한 인간화의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중간 매개 집단의 육성강화”¹⁷⁾를 목표로 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인간화된 사회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을 양극화로 보고, 이를 조장하는 정치집단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적인 압력집단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치집단과 압력집단의 연결고리가 약하기 때문에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중간집단을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4) 윤종현, 「10월 유신 사업」, 『여성』 85호, 1972년 11월, 5쪽.

15) 세계여성행동강령은 1975~85년을 ‘UN여성 10년’으로 설정하고 경제·사회·교육·보건 등의 분야에서 모든 남녀차별의 문제를 시정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김영선, 「1960~70년대 여성운동의 국제화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 『현상과 인식』 36, 2012, 176쪽.)

16) 박인혜, 앞의 글, 2009, 156쪽.

17) 크리스찬 아카데미, 「중간매개집단 요원 프로그램 관련」, 197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중간집단 교육은 교회, 농촌, 산업, 여성, 학생 등 5개 그룹을 주요 중간집단으로 선정하고 3차에 걸친 의식화교육을 실시하는 체계적인 교육이었다. 각 집단마다 교육위원과 전담 간사를 배치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교육 이수생 배출을 통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여성 중간집단 교육은 여성인간화를 강조하며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간이라는 자유주의적 인권의식을 표방했다.¹⁸⁾ 여성인권의 강조는 1974년 “우리의 운동은 문화개혁·인간 해방운동이다”라는 요지의 「여성선언」을 발표로 이어졌다. 구성원은 20대가 제일 많았고, 1974년 1월 1기 교육생을 배출한 이래 1985년 2월까지 총 1,500여명이 과정을 이수하였다. 전 크리스찬 아카데미 간사였던 한명숙은 중간집단 교육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제일 첫 번으로 이 교육(중간집단 교육)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이 교육을 받고요. 하여튼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한참동안 헤어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인가? 여자로 여태까지 살아왔는가? 이런 의식이 없이 살았어요. 그냥, 그냥 살아온거죠. 그랬는데 여기서 교육을 받고 아, 여자라는 것이 뭔가? 여성이라는 것이 뭐고 여자의 여가가 뭐고 그리고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총체적인 것을 그냥 아주 한 보따리를 한꺼번에 받았다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총체적으로 180도 달라졌어요.¹⁹⁾

이렇듯 중간집단 교육은 여성들의 의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전의 한국여성운동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소수의 의식화된 여성들’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다. 그렇기에 여성운동의 과제를 사회화시키는 과정에서 대중들과의 공감대 형성 및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지향했다. 대중화의 일환으로 교육이 끝난 후 후속모임을 유지했으며, 가족법 개정운동 및

18) 박인혜, 앞의 글, 2009, 439쪽.

19) 「한명숙(한국여성민우회 회장) 구술녹취록」, 2015년 1월 22일, 구술 아카이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미인대회 폐지운동 등의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는 1979년 3월부터 시작 되는 ‘주부 아카데미 교육’과 1982년 ‘주부아카데미협의회’의 창립으로 이어 졌다.

그럼에도 1970년대의 시민운동은 유신철폐, 인권문제 등 전반적인 사회모 순의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여성운동은 뚜렷한 집단적 움직임 보여주지 못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역시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단일현장이 없다는 점, 관심분야가 다양하다는 점, 여성운동자체를 생 업이 아닌 과외활동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 때문에 후속활동에 한계 가 있으며 운동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기에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²⁰⁾ 이후 1979년 3월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²¹⁾이 발생하자 중간집단 교육은 크게 축소되어 여성운동의 저변으로까지 확대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여성해방의 청사진을 공유하며 1970년대 여 성운동의 새로운 흐름이 되었다.²²⁾ 한명숙의 평가도 이와 비슷하다.

(수료생들이 나가서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필자) 기존에 있는 단체를 개혁하 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성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해 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성단체나 지식인 여성뿐만이 아니고 소위 이제 여성근로자들, 여 성노동운동이나 여성농민운동까지도 크리스찬 아카데미에 손이 미쳐서 그 쪽 에 여성들이 활발하게 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을 마련해줬다, 이런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지요.²³⁾

20) 크리스찬 아카데미, 『여성사회 보고』, 197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21)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은 불법서적을 탐독하고 교육생들에게 계급의식을 심었으며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유신정권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다. 1979년 3월 9일, 13일 크리스찬 아카데미 간사였던 한명숙, 이우재, 신인영, 홍한식, 김세균, 장상환이 연행되었다. 이후 중앙대학교수 유병무, 농업근대화연구회 이사 양정규, 경제학자 박현채가 연이어 연행되었다. 유신정권은 크리스찬 아카데미 관련자 가족들을 가택에 연금했으며 각종 고문을 통해 용공사건으로 조작하여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22) 김남조 외, 『강원용과의 만남 그리고 여성운동』, 여성신문사, 1998, 159쪽.

23) 한명숙, 앞의 구술녹취록.

크리스찬 아카데미 중간집단 교육은 비록 지속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했지만 1980년대 여성운동의 중심인력을 양성했다.²⁴⁾ 이전의 여성운동은 독재정권에 협조적이었기에 모든 차별에 저항하는 여성주의를 추구하기엔 근원적인 한계가 있었다. 여성들은 중간집단 교육을 받으면서 1970년대 여성운동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했고, 이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여성단체 설립을 도모했다. 여성운동 내부의 자성과 중간집단 교육의 경험은 1980년대 새로운 진보적 여성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2. 1980년대 중반 진보적 여성단체의 등장

1980년대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이하 민정당)은 1981년 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지위 향상 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문제에 힘을 쏟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단체연합’을 만들고 가정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정작 가족법 개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민정당 소속의 여성국회의원들조차 서명을 꺼리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²⁵⁾ 여전히 대부분의 여성단체는 정부 친화적이었고 적극적으로 정부에 대응하지 못한 채 가족법 개정 등 여성문제 현안은 계속해서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1979년 12월 18일 열린 UN총회에서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새로운 조약을 만들면서 여성운동에 새로운 바람이 등장했다. 한국은 1983년 5월 26일 일부 조항에 대해 유보 한 채 이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 이행을 위해 정

24) 여성의전화 창립 주도한 김희선, 이계경, 이현숙은 크리스찬 아카데미 간사와 여성사회교육 부장을 역임했다. 한명숙은 후일 한국여성민우회의 멤버이며, 이미경과 이경숙(李景淑)은 여평 창립멤버였다. 여성의전화 대표 신혜수, 신인령, 손덕수, 장필화 등의 여성학자와 최순영 이영순 등 노조여성활동가들이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교육을 경험했다. 또한 여연의 전·현직 대표 총 15인 중 1/3에 해당하는 5명이 교육과정을 거쳤다. (신상숙, 앞의 글, 76쪽.)

25) 『동아일보』 1984년 11월 5일 7면.

부에서는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설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설립 등 다양한 정부기구들을 창설하면서 여성관련 주요 정책이나 법률 개정을 진행하게 되었다.

1983년 초부터 전두환 정권은 정치인들의 해금, 해직교수 복직 허용 등 일련의 유화정책을 펼쳤다. 유신정국 이후 등장한 전두환 정부는 군사쿠데타와 광주학살 위에 세워진 정부였다. 그렇기에 강압정치로 훼손된 정통성의 회복을 위해, 또 제한적인 자유를 허용해 민주화운동 세력을 분열시키고자 유화조치를 단행했다.²⁶⁾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 유화조치는 민주화운동에 추진력을 실어주었고 여성운동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1983년의 활발한 정치공간은 1970년대 여성운동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젊은 여성운동가들을 집결시켰다. 1983년 6월 11일 ‘여성의전화’, 6월 18일 ‘여성평우회’의 창설을 시작으로 1984년 4월 17일 ‘민주화청년연합 여성부’, 1984년 11월 4일 ‘또 하나의 문화’ 등 이른바 진보 여성단체와 여성조직이 연이어 설립되었다.

여성의전화는 1983년 6월 11일 ‘아내구타에 대한 전화상담’을 내세워 크리스찬 아카데미 부위원장이었던 이화수를 중심으로 개원했다. 여성의전화는 창립취지문에서 “말 못할 사정에 놓여있는 폭력의 희생자들, 특히 남편에게 구타당하는 아내들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고 가정에서 폭력을 추방하는 동시에 사회전체의 심리적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상담사업”의 성격을 강조했다. 또한 1975년 국제여성의 해에 채택된 멕시코 선언문 중 “남녀가 가정과 사회에서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으며 남녀평등은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 보장되어야 한다(5조)”에 동조함으로써 세계 여성주의 기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²⁷⁾

26) 안정희, 「전두환 정권기의 유화국면과 학원안정법 반대운동-야당·민주화운동세력의 연대형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2009, 6쪽.

27) 「한국여성의전화 창립취지문」, 1983년 6월 11일,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 [https://hotline.or.kr:41759/vision (2017년 4월 5일 검색)]

여성의전화는 종래의 관념적인 여성운동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현장운동을 추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화상담이라는 대중적인 방식을 이용해 개월간 한 달 만에 54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며 대표적 진보적 여성단체로 자리잡았다.²⁸⁾ 또한 상담전화의 절반 정도가 남편의 매질이었다는 사실에서 수면아래 드러나지 않았던 가정폭력을 공론화하는데 일조하였다. 여성의전화는 ‘아내구타의 영향과 그 현황’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며 기관지인 『베틀』과 여성폭력 관련 자료집을 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여성평우회는 1983년 6월 18일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공동대표로 조형, 지은희, 이미경의 3인을 선출하고 기관지 『여성평우』 창간호를 발간했다. 여평 역시 발기 취지문에서 1975년 UN의 ‘세계 여성의 해’ 공포를 언급했으며, 더불어 세계 모든 국가의 여성이 다 같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평은 여성의전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주화운동과 좀 더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민주화와 통일, 여성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독재정권 하에서 공개단체를 지향하여 적극적으로 이러한 지향점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또한 민주화운동 단체가 기층민중을 중시했듯이 여평도 기층여성을 강조하고 노동문제에 기민하게 반응했다. 여평은 경제성장이 여성들의 저임금·무임노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늘날 한국여성들은 산업사회의 소외된 계층이라고 주장했다.

여평은 이전의 여성단체들과 차별성을 강조했다. 1960~70년대 여성단체들의 한계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인 예산관리로 재정의 독립을 꾀하였다.²⁹⁾ 구성멤버의 경우

28) 『동아일보』, 1983년 7월 13일, 11면.

29) 여성평우회는 재정자립의 하나로 창립 시 참기름·티셔츠 등을 팔아 천만 원이라는 자본을

에 타 여성단체에서 활동하지 않는 ‘젊은 여성’들로 회원을 받았으며 젊은 여성의 범주는 ‘40세 미만’이라는 구체적 범위로 설정해 놓은 것이 특징이었다.

여성의전화, 여평으로 대표되는 진보적 여성단체들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여성단체들이 지녔던 반관반민 성격에서 탈피해 자발적인 여성단체를 표방했다. 이전의 여성단체들은 소수 여성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산발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대중의 삶과 유리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³⁰⁾ 이에 진보적 여성단체들은 자발성에 기반 해 여성운동만의 영역을 구축하며 지속적으로 활동했고, 대중지향적인 공개 합법운동 단체를 추구했다. 또한 자료집이나 공개강좌 등의 대중 활동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현장참여를 통해 운동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 밖에 새로운 여성문인 단체를 구상하며 창립된 ‘또 하나의 문화’(이하 또문) 역시 진보적 여성단체 중에 하나였다. 또문은 발기문에서 권위주의적 질서, 부의 불균등, 생태계의 파괴 등이 본질적으로 성의 불평등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았다.³¹⁾ 성차별 의식은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이기에 정치의 민주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과 사회의 발전을 억압한다는 것이었다. 또문은 다른 여성단체들과 차별적으로 동인들의 출판활동, 공동육아 등의 소모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천운동과 여성주의에 기반 한 문화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1984년 4월 17일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하 민청련) 내에서도 ‘여성부’가 조직되었다. 민청련 여성부는 창간사에서 “여성운동은 지배자의 통치

마련하였으며, 1984년에는 이월금이 550만원, 회비가 1,600만원, 정회원이 690만원, 찬조금 1,240만원을 다 더한 수입이 1,240만 원 가량이었다. (『이옥경, 강남식, 권미혁, 김경란, 김상희, 이경숙, 이미경, 이재은, 이혜란, 지은희, 『좌담:우리의 꿈과 젊음이 거기에 있었다!』, 『여성평우회 발자취』, 2003, 86쪽.)

30) 편집부, 「한국 여성운동에 대한 재평가-단체활동을 중심으로」, 『여성평우』 2, 1984년 10월 15일, 14쪽.

31) 편집부, 「‘또 하나의 문화’를 시작하며」, 『또 하나의 문화』 2호, 1984년 12월 19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논리를 강화하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했을 만큼 기존의 여성운동에 비판적이었다.³²⁾ 또한 여성운동·기층여성운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물론 민청련 여성부는 민주화운동단체 내 부서였던 만큼 독자적인 여성운동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들의 일부는 이후 여평에 합류하는 등 여성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학생운동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여성들의 소외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생겨났다. 1970년대 여학생들은 엄격한 보안유지를 명목으로 학생 운동권에서 차단되었고 학회분위기를 버린다는 이유로 학회에서 기피 대상이었다. 가장 진보적이라고 여겨지던 학생 운동권에서조차 성차별을 당연시하였다.³³⁾ 이는 당시 여성운동에 참여했던 김상희, 신진화의 인터뷰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은 항상 남자애들이 막 다 회장하고 그러잖아. 주도를 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구, (중략) 여자애들이 거기에 너무 소극적이야, 보면. 내 느낌에. 그래서 남학생들하고 같이 하면서 거기서 부분적으로 역할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여자애들이 맡는 역할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주는걸 보면 여성적인 역할을 하는 거 같아서, 그게 늘 싫었고 그래서 특히 운동권 문화가, 우리가 나중에는 그거의 실체를, 운동권문화가 마초적이었잖아요.³⁴⁾

저희 때는 사실은 이게 이제 여성, 진보여성인데, 사실은 대학에서도 선배들이, 이제 학생운동권내에서, 그 여학생들이 활동을 하더라도 계속 주변부에 머물고, 특히 서울대 같은 데는, 아무리 똑똑하고 뭐해도, 결정에서 소외되고 하는 것들이 인제 문제의식이 생기면서, 아마 저희보다 2년 선배들부터 여학생회를 꾸렸어요.³⁵⁾

32) 민주화운동청년연합여성부, 「여성부 발족에 부쳐」, 『민주화의 길』 2호, 44쪽.

33) 광복회, 「독자적 여학생 조직을 만들기까지」, 『여성과 사회』 6, 1995, 20쪽.

34)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부회장) 구술녹취록」, 2013년 3월 26일, 구술 아카이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소장.

35) 「신진화(한국여성민우회 홍보간사) 구술녹취록」, 2013년 2월 15일, 구술아카이브, 민주화운

직접적으로 차별을 경험한 여학생들은 1984년 11월 20일 여학생 성추행사건 규탄대회 등으로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여학생 조직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성차별적인 운동권 문화에 반발하며 총여학생회를 건설하게 되었다.³⁶⁾ 총여학생회는 “인간해방이란 여성·남성 모두가 완전한 인격체로 존재하는 것이며 여성의 해방 없이 인간의 해방은 달성할 수 없다”는 사고에 기반한 독자적인 여학생들의 조직이었다.³⁷⁾

서울대 총여학생회의 경우 여학생이 직접적인 투쟁에 뛰어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비판하면서, 여학생운동은 직접적인 체험과 실천양식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³⁸⁾ 서울대 총여학생회는 민주적인 자치기구의 부재와 여학생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기존 여학생 언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984년에 독자언론매체인 『해방』을 발간하였다.³⁹⁾ 또한 한양대 총여학생회는 『한양여성』, 건국대 총여학생회는 『건국여성』 등의 회보를 발간하며 여학생들만의 독자적인 매체를 구성했다.

이렇게 1980년대 중반 유희국면이 도래하면서 여성의전화, 여평, 민청련 여성부, 총여학생회 등 다양한 여성운동세력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각자의 활동방향에 따라 여성대중들의 사회적 불평등 극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나아가 1984년 공권력의 성추행이라는 구조적 폭력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저항전선을 형성하였다.

동기념사업회 소장.

36) 『고대신문』 1984년 11월 19일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 3, 223쪽 재인용)

37) 편집부, 「기생관광에 관하여」, 『한양여성』 2호, 1987년 5월 1일, 6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38) 편집부, 「여학생회여 진진하라」, 『해방』 1호, 1984, 5쪽.

39) 편집부, 「창간사: 우리의 말과 글과 목소리로」, 『해방』 1호, 1984, 3쪽.

Ⅲ. 진보적 여성단체의 연대활동

1. 경찰에 의한 여대생 성추행 사건과 여성단체의 대응

1980년대 시위를 하는 여학생들이나 공장 노동자들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⁴⁰⁾ 1984년 9월 4일 청량리 경찰서에 연행된 경희대학교 여대생이 경찰로부터 성추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던 도중 여학생에게 욕을 하면서 심하게 구타하였으며, 피해자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뒤이어 11월 3일, 학생의 날 기념식에 참가했던 고려대 여학생들이 서대문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경찰은 또다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쌀부대로 감은 각목으로 여학생들을 때렸다.⁴¹⁾

반복되는 경찰의 추행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1984년 11월 13일 12개 대학 여학생회 연합체인 ‘여학생연합 여학생추행사건 진상조사위원회’⁴²⁾(이하 ‘추행사건조사위’)가 만들어졌다. 추행사건조사위는 「여학생 추행사건 사례보고서-폭력경찰의 여대생 및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적탄압사례」를 발간하여 경

40) 1983년 4월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서울대 진달래사건) 및 1984년 한 해에만 신문로 가두시위 중 전경이 성추행을 한 사건,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약점으로 아세아 스와니사에서 발생한 성폭행, 대우어패럴에 근무하던 여성노동자가 강간당한 채 변사체가 되어 발견된 사건 등이 있었다.(여학생연합 여학생추행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여학생 추행사건 사례보고서-폭력경찰의 여대생 및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적탄압 사례」, 1984년 11월 1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1984년 5월 19일 ‘광주의거 4주년 기념집회’에 참석한 이경은이 귀가 중 경찰에게 폭행당해 6월 5일 사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민주화운동청년연합, 「경찰인가! 살인마인가!-임산부까지 폭행을 해 사산시킨 폭력경찰의 만행을 규탄한다」, 198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41) 고려대학교 여학생회, 「학생의 날이 살인경찰의 여대생 강간의 날인가?」, 1984년 11월 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42) ‘여학생연합 여학생 추행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건국대 여학생부, 경희대 여학생부, 고려대 여학생회, 서울대여학생회, 사립대여학생부, 덕성여대민주화추진위원회, 서강대 여학생부, 성균관대여학생제대, 성심여대 학민추, 연세대학 여학생부, 이대민주화 추진위원회, 외대여학생협의회 등의 단체로 구성되었다.

찰의 성폭행 사례를 고발했다. 추행사건조사위는 여성이라는 조건 때문에 극악한 성적 만행을 감당해야 하는 여학생과 여성노동자들이야말로 적극적인 폭로와 집단적 투쟁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또한 “폭력을 등에 업고 폭력으로 밖에 유지할 수 없는 현 정권”을 비판하며 “반민주적·반민족적·반민중적 폭력정권은 이 사건을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⁴³⁾

피해 여학생들은 경찰의 성추행을 폭로하기로 결심하고 11월 16일 학생 1천여 명이 모인 고려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보고 및 피해자 증언을 했다. 피해 여학생은 “지난 9월 4일 연행돼 청량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신체검사를 이유로 전경이 보는 앞에서 옷을 모두 벗겼다.”고 폭로했다.⁴⁴⁾

여학생들의 폭로로 사건이 쟁점화 되자 서울시경은 여대생 성추행사건을 조사했다. 그러나 서울시경은 11월 17일 「여학생 추행사건 진상」이라는 문건을 공표해 “경찰이 연행한 여학생들의 옷을 벗기고 폭행을 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서울시경 제2 부국장은 여학생 모두를 조사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판명 났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최선윤은 양심선언을 통해 자신은 단지 기자를 만나 증언한 것뿐이며, 경찰 중 어느 누구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⁴⁵⁾ 추행사건조사위는 서울시경이 피해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⁴⁶⁾

경찰의 성추행 사건은 이전에도 빈번했으나 문제 제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여대생들이 성추행

43) 여학생연합 여학생추행사건 대책위원회, 「성명서」, 1984년 11월 2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44) 『경향신문』 1984년 11월 17일자 11면.

45) 최선윤, 「양심선언」, 1984년 11월 2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46) 여대생추행사건 대책협의회, 「여대생 추행사건대책 경과보고」, 1984년 12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문제를 폭로하고, 여성단체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쟁점화 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여성단체들은 1984년 11월 21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 사무처장 박영숙을 회장으로, 한국최초의 여성변호사인 이태영과 양심범가족협의회 회장을 지냈던 공덕귀를 고문으로 한 기독교단체, 여성단체, 학생단체 등 10개가 모여 ‘여대생추행사건 대책협의회’⁴⁷⁾를 결성하고, 경찰과 정부가 확실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사실을 밝혀 폭행관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여대생추행사건 대책협의회에 소속된 여평은 진상 조사는 물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단·선전물을 만들어 집집마다 투척하기도 했다.⁴⁸⁾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치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오히려 경찰은 앞장서서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현 정권의 허구적인 민주·정의·질서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었다.⁴⁹⁾ 성추행 역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인권 침해로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다.⁵⁰⁾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되려 피해학생들을 협박하거나 여대생추행사건 대책협의회의 임원들을 수배하였다. 11월 26일 피해 여학생인 김영순과 최선운이 서울지방 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경찰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고소취하를 강요받았으며, 경찰은 피해자의 주변인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으며 사건을 은폐했고 11월 23일 여대생 성추행사건 대책협의회와 12개사 내외신 기자들의 기자회견 역시 지면에 신지 않았다.

47) 성추행대책협의회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인권위원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신도회 전국연합회 인권위원회, 여성평우회, 여성의전화,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여성선교위원회,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여성부,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여성부가 있었다. 이후 1984년 11월 2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 협의회가 가입하여 11개 단체가 되었다.

48) 여성평우회 창립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앞의 책, 78쪽.

49) 여학생연합 여학생 추행사건 대책위원회, 「성명서」, 1984년 11월 2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50) YWCA연합회, 「‘여대생 추행사건’에 대한 건의」, 1984년 12월 1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1984년 11월 29일 권이혁 문교부장관은 국회 문공위에서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문제권 학생들의 모임이나 유인물을 통해 주장한 내용을 경찰과 대학당국에 알아본 결과 사실과 달랐다.”며 “추행이란 표현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조사과정에서의 과잉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혀 학생들의 주장을 묵살했다.⁵¹⁾

이에 ‘경희대학교 여학생 추행사건 대책위원회’(이하 경희대대책위)는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 인권위원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경희대대책위는 공권력이 사건을 엄정 수사하기는커녕 허위진술서를 강제로 받아내고 허위 사실 유포죄를 뒤집어씌우는 등 또 하나의 범죄를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전 사회 민주화 세력에 대한 인권탄압의 고도의 형태로서 여성노동자 및 여학생에 대한 성적폭행까지 이른 현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폭력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여성단체, 인권단체를 비롯한 전사회 민주세력과 공동으로 이에 대처할 것을 촉구”⁵²⁾하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84년 12월 6일 여대생추행사건 대책협의회는 이 사건이 “대학생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무참히 짓밟기 위한 수단으로 자행된 것”이며 정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공권력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⁵³⁾ 또한 기존 여대생추행사건 대책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여타 여성단체들과 교섭하여 연대를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NCC 여성위원회 등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었다. 여평의 활동가였던 이미경은 당시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

51) 『동아일보』 1984년 11월 29일 1면.

52) 경희대학교 여학생 추행사건 대책위원회, 「엔.씨.씨에서의 농성을 마치며」, 1984년 12월 3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53) 여대생추행사건대책협의회, 「결의문」, 1984년 12월 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여성들이 연대해서 독재정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 한 거예요. (중략) 힘 있고 그리고 차분하게 잘 진행된 일로 기억해요. 피해여학생들도 만나 진술도 받고, 나중에 당사자가 고발을 취하하면서 정리되었지만 독재권력에 투쟁하는 여성연대 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 거 같아요.⁵⁴⁾

여성단체의 연대가 확장되고 체계성을 지나자 해외에서도 잇따라 지지성명이 전해졌다. 1985년 3월 6일 ‘일본기독교교풍회’에서 한국의 여러 여성단체들의 여학생 지원에 나선 것에 경의를 표하며 여대생추행사건 대책협의회에 연대 메시지를 보내왔다.⁵⁵⁾ 또한 ‘재서독 기독교 한인교회 여신도회 연합회’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에 지지성명을 보냈다.⁵⁶⁾

재미한인사회 민주화운동단체인 ‘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연합’(이하 민통연합)은 경찰의 여학생 성추행을 비판하였다. 민통연합은 1984년 11월 26일 미국무성 앞에서 시위하며 경찰이 여대생에게 성적인 학대행위를 가했다는 것은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군사독재정권 지원 말라’, ‘추행경찰 엄단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으며, 미 국무성에 전달한 성명서에서 미국이 전두환 정부를 옹호하는 것은 미국의 전통과 이상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⁵⁷⁾

1980년대 초반 각 대학 내의 총여학생회는 남성위주의 민주화운동·학생위원회와는 차별화되는 문제의식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와 연대하려는 의식은 뚜렷하지 않았다. 1984년 경찰에 의한 여대생 성추행사건은 여성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여대생과 연대활동을 맺는 계기가 되었고, 사건을 주도적으로 전개해나가는 구심점이 되었다.

한편 여성운동단체들은 이 사건이 공적폭력이라는 인식을 확대시키며 구

54) 이옥경 외, 앞의 책, 이미경 발언, 78쪽.

55) 일본기독교교풍회, 「연대맺세지」, 1985년 3월 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56) 재서독 기독교 한인교회 여신도회 연합회, 「결의문」, 1985년 3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57) 한국민주회복 통일연합, 『민주현황』, 1985년 1월 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조직 폭력과 의미 있는 연관성을 지적했다. 여평은 여대생추행사건을 다루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현대의 모든 부권제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으며, 강간행위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 강간행위는 여성에 대한 침범, 증오, 멸시 그리고 인간성을 파괴하거나 더럽히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밝히며 가부장제를 비판했다.⁵⁸⁾

경찰에 의한 여대생 성추행사건은 계속된 경찰의 협박으로 피해자 여학생들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을 완전하게 마무리 짓지는 못했지만, 진보적 여성단체와 여학생회는 경찰의 여대생 성추행 사건을 통해 단일 운동체의 성격을 뛰어넘었다. 또한 여대생추행사건 대책협의회 활동을 통한 연대의 경험은 이후 여성운동의 힘을 결집시키는 단초가 되었다.

2. 여성노동자의 권리확보를 위한 연대

경찰에 의한 여대생 성추행사건에 결속력 있게 대처한 진보적 여성단체들의 교류는 1985년 3월 8일 제1회 ‘3·8 여성대회’⁵⁹⁾의 개최로 이어졌다. 3·8 여성대회에서 주창한 「민족·민주·민중과 함께하는 ‘85 여성운동선언」⁶⁰⁾은 세계여성운동과의 연대와 민족·민주·민중운동을 강조했는데, 특히 기층 여성들

58) 편집부, 「각계 각 층에 가해지는 성적폭력-여대생, 여성노동자 추행 및 강간사건, 보호운락 여성 집단탈출사건」, 『여성평우』 3호, 1985년 3월 15일, 40쪽.

59) 1985년 3·8 여성대회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984년 9월 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CCA 주최 migration woman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각국의 여성문제가 심각함을 자각하고 여성문제를 사회화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제정되어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지킬 것을 결의하고 각국에서 준비되어 오던 중, 한국에서도 교회여성연합회와 N.C.C 여성위원회에서 발의해서 그 동안 여대생 추행사건에 연대해서 싸우던 단체들이 여대생 추행 사건을 비롯한 기층여성 문제에 중점을 두어 세계 여성의 날 기념 ‘85 한국여성대회를 진행하기로 2월 26일 여대생추행사건 대책위원회에서 결의하였다.” (여대생추행사건 대책협의회, 「세계 여성의날 기념 ‘85 한국여성대회 보고서」, 198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60) ‘민족·민주·민중과 함께하는 ‘85 여성운동선언’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여성부,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여성선교위원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협의회, 여성평우회, 여성의전화, 또 하나의 문화, 주부아카데미협의회,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여성부,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여성부, 가톨릭여성농민회가 참여했다.

이 당면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여성운동이며 민족민주운동의 일환임을 선언했다. 이를 통해 여성운동도 부분운동이자 전체운동과 같은 목표와 성격을 갖는다는 인식이 공유되기 시작했으며,⁶¹⁾ 기층여성으로 대표되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여성노동자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1985년 3월에서 6월까지 진행된 성도섬유 부당해고사건(이하 성도해고사건)이 발단이었다. 성도해고사건은 이력서 허위 기재라는 명목으로 신건숙과 강희경, 장경림, 김홍해, 박남희 등 11명의 여성노동자가 성도섬유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건이었다. 여성노동자들이 항의하자 성도섬유는 정보과 형사를 개입시켜 6시간 동안 여성노동자들을 끌고 다니는 등 강제납치를 저질렀으며, 경찰은 여성노동자들을 남부서로 연행해 수차례의 폭언·폭행과 성추행을 가했다.

공권력의 성추행과 폭력이 학생운동 세력을 넘어 여성노동자에게 이어지면서 여성단체, 여학생연합은 집단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1985년 6월 10일 10개의 여성단체와 17개 대학 여학생연합⁶²⁾은 여신학자협의회 회장 이우정, 해고노동자 박남희를 위원장으로 한 ‘성도섬유해고노동자를 위한 복직추진위원회’(이하 성도노동자복직위)를 구성하였다. 성도노동자복직위는 기업의 매출에 타격을 주고자 성도섬유 소속의 브랜드였던 톰보이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실시했다. 6월 19일 종로1가 톰보이 매장 앞에서 진행된 불매시위는 실질적인 소비계층이었던 여학생연합과의 연대를 통해 보다 성공적일 수 있었다. 여성단체의 피케팅과 서명운동은 일간지에 실리면

61) 이승희, 앞의 글, 295쪽.

62) 성도노동자복직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인권위원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여성의전화, 여성평우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여성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 민중불교운동연합 여성부,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여성부, 한국기독교학생회 총연맹 여성부, 경희대학교 총여학생회, 고려대학교 총여학생회, 덕성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상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총여학생회, 서울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성심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시립대학교 총여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여학생부,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여학생부, 홍익대학교 총여학생회 등이 참여하였다.

서 사회적인 쟁점이 되었고, 대중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지지 여론을 형성했다.⁶³⁾ 또한 성도노동자복지위는 불매운동 스티커를 만들고 전단을 배포하는 등 불매운동을 효과적으로 확산시켰다. 톰보이 불매운동의 영향력은 당시 불매운동에 참여했던 운동원인 이경숙(李景淑)의 인터뷰에서 잘 드러난다.

(시위를 하면서 피켓 등에; 필자) 전화번호를 적어놨는데 매장들한테 전화도 왔어요. 저기 매상이 툭툭 떨어지니까 이거 좀 중지해 달라. 그래서 굉장히 영향이 있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성도 쪽에서 막 면담을 가도 보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리고 복지 절대 불가라고 했는데 타협안이 됐어요.⁶⁴⁾

결국 성도섬유는 자체 발표를 통해 불매운동에 대해 해명해야 할 정도로 매출이 급감하였다. 성도섬유의 부당해고는 국회에서까지 논의되었으며, 노사분규의 책임을 지고 특별근로감독을 받기도 하였다.⁶⁵⁾

성도해고사건은 여성단체와 여학생회의 연대가 여성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이라는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성도노동자복지위의 활동은 불매운동을 통해 여성노동자와 관련한 논의를 사회 저변으로 확대시켰으며, “민주주의 의제들을 이른바 사적 영역의 일상생활로 확장”함으로써 진보적 민주화 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을 받았다.⁶⁶⁾ 여평에서 활동했던 이경숙(李景淑)의 인터뷰는 이를 대변한다.

저는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여성단체가 그런 불매

63) 『동아일보』, 1985년 6월 20일자 10면.

64) 「이경숙(李景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국장) 구술녹취록」, 2013년 3월 10일, 구술아카이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65) 『경향신문』, 1985년 7월 4일자 1면; 『동아일보』, 1985년 7월 4일자 3면.

6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 3』, 2010, 872쪽.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성단체가 갖고 있는 우리의 힘은 굉장히 미약하지만 최선의 힘을 다해서 불매운동은 사실 어려운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해가지고 여성단체가 여성노동자하고 연대를 한 사건, (중략) 노조설립 문제로 해서 해고된 것에 대해서 복직추진을 해서 그런 기층여성과 연결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⁶⁷⁾

이렇듯 여성노동자가 억압받는 현실은 진보적 여성운동이 함께해야 할 투쟁의 한 갈래임을 보여주었다. 1970년대는 여성노동자의 증대와 더불어 여성노조가 형성되며 투쟁이 활발해지는 시기였고, 그러한 흐름이 지속되어 1980년대 진보적 여성운동에서 여성노동자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었다.

한편 여성노동권과 관련한 직장 내 불평등도 쟁점화 되었다.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영업부직원 이경숙(李慶淑)은 가해자에게 퇴직연령인 55세까지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보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85년 4월 20일, 서울민사지법합의 15부는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평균 연령인 26세부터는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며 이경숙(李慶淑)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수를 터무니없이 줄인 판결을 내렸다.⁶⁸⁾ 이 판결은 여성회사원의 수입을 여성의 평균 결혼연령인 25세까지로 상정함으로써 26세 이후는 가정주부의 임금으로 환산했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지탄을 받았다. 또한 가정주부의 일당을 최하위 생계유지 노동의 노임 4,000원으로 계산해서 책정하였다. 이에 당시 보편적인 관례였던 여성의 조기정년제가 논란이 되었다.

가사노동은 육아, 요리, 청소, 간호, 세탁 등 수많은 범주를 포함한다. 당시 남성은 이러한 일들에서 제외되며 사회진출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여성은 집안일과 생산 활동을 함께 수행하거나 집안일을 우선시하도록 강요하는

67) 이경숙(李慶淑), 앞의 구술녹취록.

68) 이경숙(李慶淑)이 청구한 금액은 3천5백50만원이며 법원의 판결은 8백46만원이었다. (『동아일보』 1985년 4월 20일자 7면.)

사회통념에 의해 주요노동력이 아닌 이차적 노동력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진보적 여성단체들은 남성의 업적은 물론 사회발전 역시 여성의 무임가사노동에 기반 한다고 보았다. 여평은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권을 명백히 위배하며, 가사노동의 가치척도를 현실적 액수에 기초해 산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남녀역할이라는 통념이 여전히 사회에 남아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하며 전근대적인 결혼퇴직제를 비롯한 모든 여성의 조기정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⁹⁾

여평 구성원들은 이경숙(李慶淑)을 직접 찾아가 항소를 설득했고, 조영래 변호사를 찾아가 무료변론을 부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사회적으로 쟁점화하려 노력했다. 이후 ‘여성차별정년무효소송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약 3개월 동안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경숙(李慶淑) 사건’ 알려지자 진보적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는 평을 받던 여협 등의 단체 역시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1985년 5월 9일 한국YWCA 주최로 여성정년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면서 대중들의 광범위한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⁷⁰⁾ 이러한 분위기는 7월 15일 6개 단체가 모여 여성의전화 원장 김희선을 대표로 하는 ‘25세 여성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여성단체협의회’⁷¹⁾(이하 여조연)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여조연은 성명서, 건의문 등에서 “본 연합활동의 당면목표는 항소심에서 여성차별적인 부당성이 시정되는 판례를 남기는데 있다. 즉 (중략) 연속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계몽과 이 사건에 대한 여론 환기의 장으로 활용한다.”⁷²⁾며 주요 계획을 설정하고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사노동과 여성

69) 여성평우회, 「결혼퇴직제를 정당화시킨 사법부에 대한 우리의 주장」, 1985년 4월 27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70) 『동아일보』 1985년 5월 10일자 7면.

71) 25세 여성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여성단체협의회에는 또 하나의 문화, 여성의전화, 여성평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가 참여하였다.

72) 25세여성조기정년제철폐를위한여성단체연합회, 「25세 여성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운동」, 198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운동'을 주제로 열린 3차 토론회(9월 10일, 9월 23일, 10월 8일)는 200여명이 장대를 가득 매우는 등 여성들의 열띤 관심과 호응을 얻으며⁷³⁾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사회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여조연은 전문가의 평가를 도입하고자 외대 경제학과 김애실교수 연구팀에 의뢰하여 가사노동의 임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했다.⁷⁴⁾ 이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여조연의 활동은 1986년 3월 4일 2심에서 미혼여성의 정년이 55세라는 최초의 공식적 판결을 얻어냈다. 이경숙 사건은 체제 안에서의 승리라는 점에서 1980년대 여성운동의 중요한 성과가 되었다. 1983년 1월 4일 여성의 조기정년의 불합리성을 문제 삼아 한국전력통신공사의 여성전화교환원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⁷⁵⁾ 불과 2년 만에 여성 조기정년제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여평에서 활동했던 강남식은 여조연의 활동이 중산층 가정주부의 관심까지 이끌어냈던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제가 그걸(이경숙 사건) 보고 어머 이거 아닌데 왜냐면 여성학을 했기 때문에 벌써 문제의식은 있는데 그거를 저는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여평에 이경숙(李景淑) 언니를 위시한 사람들이 이거를 운동의 이슈화해서 투쟁으로 삼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움이었어요 그게. 아 여기 힘이 있고,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합법에서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주장만 하고 (이)론투쟁만 하고. 막. (중략) 그 때 깜짝 놀랐잖아요. (중략) 그래서 이 합법 공간에 대해

73) 『동아일보』 1985년 9월 11일자 7면.

74) 김애실교수 연구팀은 가사노동의 임금이 한 달 평균 45만 원의 가치로 환산되며(일당 최저 6,564원~최고 15,123원) 한국의 1년차 주부는 약 550만원, 10년차 주부는 5,500만원, 20년차 주부는 1억 원이 넘는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75) 1983년 1월 4일 한국전력통신공사의 전화 교환원이 다른 직종보다 여성의 정년이 12년 낮게 책정된 인사규정(교환원 43세, 일반직 55세)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남녀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민사법원에 정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권미혁, 「진보적 여성연대의 힘」, 『6월 항쟁을 기록하다』, 2007, 190쪽)

서 인식을 다시 하게 됐죠.⁷⁶⁾

이렇게 진보적 여성단체가 연합하여 여성노동권을 위해 활동한 것은 유의미한 지점으로 남았다. 여성의전화 역시 여조연의 활동에 대해 개별현장을 넘어 전 계층 여성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⁷⁷⁾

여조연의 경우 진보적 여성단체와 여학생연합이 연대하고, 보수 여성단체로 대표되는 여협의 후원을 받으며 기존의 기치를 뛰어넘는 협력을 보여주었다. 또문은 3·8여성운동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여조연의 성명에 참여했다. 진보적 여성운동이나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인 접점이 없었던 주부아카데미협의회 역시 지지서명을 보냈다. “연합활동은 여성문제 해결의 구체적 노력을 통해 여성단체간의 연대의식을 다져나감과 동시에 여성운동의 여러 과제들에 대해 앞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될 것이다.”⁷⁸⁾는 여조연의 주장대로 여성단체의 연대는 지속성을 가질 수 있었다.

여조연의 활동은 198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개최한 제2차 한국여성대회에서 이우정을 위원장으로 하여 ‘한국여성대회 여성연합 생존권대책위원회’⁷⁹⁾(이하 생대위)를 발족시키는 성과로 이어졌다. 생대위는 “남녀평등한 통일민주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우리 여성단체들은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기 위

76) 「강남식(한국여성연구소 소장) 구술녹취록」, 2013년 3월 24일, 구술 아카이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77) 편집부, 「여성조기정년제철폐의 의의와 과제-25세의 정년퇴직」, 『베를』 13, 1986년 4월 30일, 3쪽.

78) 25세여성조기정년제철폐를위한여성단체연합회, 앞의 글, 1985년.

79) 한국여성대회 여성연합 생존권대책위원회에는 가톨릭 여성농민회, 또 하나의 문화,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 민주통일연합 여성부, 민중불교운동연합 여성부, 서울노동운동연합 여성부, 여성의전화, 여성평우회, 전북 민주화운동 협의회 여성분과, 주부 아카데미 협의회, 충북 민주화 운동 협의회, 한국 가톨릭 농민회 여성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여성부, 한국기독교통민회총연맹 여성부,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여성선교위원회, 한국 기독교학생회 총연맹 여성부,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여성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사회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해, (중략) 전체 여성의 생존권 투쟁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적, 지속적 활동을 전개하고자 생존권 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킨다.”며 이경숙 사건 이후에도 여성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을 밝혔다.⁸⁰⁾

1984년 여대생추행사건 대책협의회 활동은 성폭력 문제에 여성단체의 연대가 함께 대응하며 공권력에 저항했던 최초의 활동이었다. 이는 1985년 여조연의 활동으로 이어졌고, 여성노동자를 대변하는 여성단체들의 활동은 대중의 큰 관심과 지지를 불러일으켰다.⁸¹⁾ 이후 생대위의 설립은 진보적 여성단체가 기층여성은 물론 중산층여성까지 아우를 수 있음을 증명했다. 1984년부터 1986년 초까지 이어지는 여성단체들의 연대 경험은 이후 부천시 성고문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사태에 시의적절 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게 된다.

3. 부천시 성고문 사건과 민주화운동 세력과의 연대

1980년대 일간지 등의 보도매체들은 경찰의 성폭력을 보도하지 않았다. 1983년에서 1986년까지 여성단체가 고발·폭로한 경찰의 성폭행은 동양고무 백양메리야스 여성노동자폭행⁸²⁾, 토지개발공사의 강제철거과정에서 일어난 성폭행⁸³⁾, 성남경찰서에서 발생한 여성폭행 및 성추행⁸⁴⁾ 등 다수였다. 경찰

80) 한국여성대회 여성연합 생존권대책위원회, 「한국여성대회 여성연합 생존권대책위원회 발족」, 1986년 3월 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81) 여성평우회의 경우 1983년 창립 당시 회원수는 발기인 26명 회원 50명, 1984년 6월 16일 임시총회에서는 정회원이 58명, 1985년 1월 27일 2차 총회 시에는 정회원이 67명이었다. 그러다 1985년 6월 창립기념대회를 기해 발행한 여평 소개 자료에는 120명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회원수 확보와 더불어 대중의 지지를 알 수 있는 단서는 회비이다. 창립 시 연회비가 6,000원이었던 것이 85년에는 2배인 12,00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83년 창립총회자료; 84년 6월 임시총회자료; 85년 정기총회자료; 85년 창립기념대회자료 (강남식, 「여성평우회의 활동과 여성운동사적 의의」, 『여성평우회 발자취』, 2003, 45쪽 재인용]

82) 편집부, 「여성의진화 소식」, 『베틀』 13호, 1986년 4월 30일, 11쪽.

83) 편집부, 「여성소식」, 『베틀』 14호, 1986년 6월 10일, 9쪽.

84) 편집부, 「성남서에서도 성폭행」, 『베틀』 15호, 1986년 8월 30일, 9쪽.

의 폭력 정도도 점차 심해져 1986년에는 지방에서도 시위가 열릴 정도였다.⁸⁵⁾ 여평은 군사정권이 민중민주운동을 하는 여성들을 탄압하기 위해 성폭행을 자행했다고 비판하였다.

감춰져있던 공권력의 성폭력이 수면위로 드러나는데 결정적이었던 것은 1986년 6월 폭로된 ‘부천시 성고문 사건’이었다. 1986년은 민주화투쟁과 개헌요구가 높아지고 있던 개헌정국이었다.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경인지부 결성대회에서 격렬한 시위가 발생해 다수의 연행자가 발생하는 ‘5·3 인천사태’(이하 인천사태)가 일어났다. 정부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조직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인천사태를 용공좌익조직에 의한 폭력사태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정부가 인천사태를 통해 민주화운동세력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문이 발생했다. 인천교도소의 수감자 면담 중에 밝혀진 바로는 여자의 경우 하복부·음부를 구둣발로 찼으며 여대생 앞에서 바지를 반쯤 벗어 내리고 본인의 팬티를 보여주며 고통, 모욕감 및 수치심을 주었다고 했다.⁸⁶⁾

부천시 성고문 사건을 폭로한 권인숙은 1986년 5월 20일 부천 소재의 공장에 허명숙이라는 가명으로 입사 후 위장취업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수배자들의 거처를 자백하라며 권인숙을 고문했고, 그 연장선에서 성고문이 함께 일어났다. 피해자 권인숙은 다른 여성 재소자의 동생을 통해 NCC 인천지역 인권선교위원회와 5·3사태 구속자 가족들에게 성고문 폭로 의사를 전하였고, 6월 26일 권인숙의 폭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6년 6월 26일 폭로가 있었던 당일, 생대위는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지만 사건이 중대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발 빠

85) 1986년 충북 기독교청년협의회에서는 ‘8·31 경찰폭력 및 민주화운동탄압 규탄대회’가 열렸다. 『인권소식』 216호, 1986년 9월 25일, 6쪽.

86) 신한민주당, 『인천사태(고문) 보고서(1차)』, 1986년 6월 13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르게 성명서를 냈다. 전두환 정권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성노동자들에게 극심한 고문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즉각적으로 알렸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생대위가 “고문수사와 성적폭행을 자행하는 군사정권은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통해 여성단체 활동에서 처음으로 군사정권 퇴진을 언급했다는 것이다.⁸⁷⁾ 생대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근본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고문이 항상 존재할 것이기에, 폭력과 성고문 반대투쟁과 더불어 민주화 투쟁 역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⁸⁸⁾

6월 30일 생대위는 권인숙이 인권위원회를 통한 변호사 선임, 여성단체의 대응을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7월 1일 생대위 대표들은 대책회의를 진행하며 사건을 맡은 이상수 변호사를 만나 성고문 사실을 확인했으며, 7월 2일 여성연합의 확대를 위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책회의 직후 여성의전화 김희선 원장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7월 5일 생대위는 김희선 원장의 구속은 ‘불붙고 있는 여성들의 민주화운동 열기를 꺾고 성고문을 은폐시키기 위한 여성운동 탄압’이라며 공개항의서를 냈다.⁸⁹⁾

7월 3일 권인숙이 문귀동을 인천지검에 고소하였으나 가해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자 7월 5일 9명의 변호인단이 집단으로 문귀동을 고발했고, 이에 성고문 사건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여성단체는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7월 7일 ‘여성단체연합 성고문대책위원회’(이하 여연성고문대책위)⁹⁰⁾를 결성했으며, 7월 11일 보다 강력한 연합을 위해 23개 여

87) 한국여성대회 여성연합 생존권대책위원회, 『여성에 대한 성적고문을 규탄한다!』, 1986년 6월 2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88) 한국여성대회 여성연합 생존권대책위원회, 『여성에 대한 성적고문 규탄 농성: 기자회견 보도자료』, 1986년 6월 2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89) 한국여성대회 여성연합 생존권대책위원회, 『공개항의서』, 1986년 7월 5일 (『베를』 15, 1986년 8월 30일, 8쪽 재인용)

90) 여성단체연합 성고문대책위원회에는 가톨릭여성농민회, 기독교여민회, 또하나의문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여성위원회, 민중불교

성단체, 종교계와 그에 소속된 민주화운동단체를 망라해 ‘부친경찰서 성고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부친서성고문공대위)⁹¹⁾를 결성하였다. 여연 성고문대책위 위원장인 박영숙이 대표로, 장상수녀회의 이영순 소피아 수녀가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부친서 성고문공대위는 부친경찰서에서 발생한 성고문을 규탄하고 “우리들은 전민주화운동단체와 국민들에게도 우리의 싸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며 연대의 확산을 요청했다.⁹²⁾

특히 여성단체의 연대조직인 여연 성고문대책위의 요구조건 중 눈에 띄는 것은 “폭력, 성고문 등 온갖 수단으로 민중민주운동 탄압하는 군사독재 물러가라”라는 구호이다.⁹³⁾ 사건별 연대를 통해 사실규명과 처벌을 우선으로 요구했던 이전과 달리 여연 성고문대책위는 정권교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부친서 성고문공대위 역시 “개헌을 백번 해보았자 이런 사건을 흐지부지 덮어가는 풍토에서는 결코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임을 검찰은 직시해야 할 것.”⁹⁴⁾이라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부친서 성고문 사건은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이 아닌, 성이 고문의 도구로 악용되었으며 계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⁹⁵⁾ 성고문은 단순

운동연합 여성부, 서울노동운동연합 여성부, 성남민주사회발전연구회 여성분과, 여성사회연구회, 여성의전화, 여성평우회,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 여성분과, 주부아카데미협의회, 충북민주화운동협의회, 한국가톨릭농민회 여성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여성부, 한국기독교농민회연합회 여성부,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여성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사회위원회 등이 있었다.

91) 부친경찰서 성고문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한 단체로는 여성단체연합 성고문대책위원회, 천주교수녀회 장상연합회,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고문대책위원회, 불교정토구현 전국승가회, 천주교정의사회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가 있었다.

92) 부친경찰서 성고문 공동대책위원회, 「천인공노할 성 고문을 규탄한다」, 1986년 7월 1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93) 여성단체연합 성고문대책위원회, 「부산경찰서에서 고문수단으로 여성을 강간」, 1986년 7월 1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94) 부친경찰서 성고문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성고문 진상 은폐하는 검찰 수사결과를 전면 거부한다」, 1986년 7월 1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95) 부친경찰서 성고문 공동대책위원회, 「권모양에 대한 부친경찰서 형사 문귀동의 성고문을 고발한다」, 1986년 7월 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히 경찰 개인의 범죄행위가 아니라 고문수사의 방법으로 이용됐다는 점에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기저에 깔린 폭력성과 야만성의 발로였다.⁹⁶⁾ 사건에 항의했던 많은 사람들은 성고문이 구조적 폭력에서 파생된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했다. 재야운동권 역시 이것은 권인숙 개인의 일이 아닌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라고 지적했다.⁹⁷⁾

그러나 1986년 7월 16일 검찰의 수사발표는 부천서에서 발생했던 성고문 문제보다 피해자인 권인숙의 대학생활과 의식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권인숙이 불온서적을 탐독하는 혁명세력이었고, 의식화과정을 위해 성조차 도구로 사용하며 투쟁전략의 일부로서 고문 폭행 추행사건을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검찰은 보도진과의 대담에서 문경장이 서너 번씩 주먹으로 가슴을 밀면서 툭툭 쳤다고 인정하며 왜 재킷을 벗게 했냐는 질문에 “옷을 벗으라고 하면 수치심을 일으킬 것으로 보았다.”고 대답하는 등 피의자의 폭력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⁹⁸⁾

1986년 7월 18일 변호인단은 공안당국이 권인숙의 고소를 ‘운동권학생의 상습적인 의식화투쟁’이라고 단정한 것은 악의적인 모함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한 “성범죄는 은밀한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목격자의 직접증언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여러 정황에 비추어 믿을 만한 정도이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비판했다.⁹⁹⁾

납득하기 힘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대중들의 비난은 거세졌으며, 경찰의 범행 은폐시도는 여론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검찰의 발표는 결과적으

96)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광주지부 송백희·전남대학교 총여학생회·조선대학교 총여학생회, 「여성노동운동가 허명숙양에게 자행된 문귀동 형상의 야만적 성폭력을 규탄한다」, 1986년 7월 1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97) 재야간담회, 「권인숙 양에게」, 1986년 7월 2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98) 『동아일보』 1986년 7월 17일 6면.

99) 고영구·김상철·박원순·이돈명·이상수·조영래·조준희·홍성우·황인철, 「검찰발표에 대한 변호인단의 견해」, 1986년 7월 1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문귀동 개인의 폭력이 아닌 군사정권의 조직적인 범죄임을 시인한 모양이 되었으며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으로 비추어졌다.

검찰의 불투명한 수사결과로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7월 19일 명동성당에서 ‘고문·성고문·용공조작 범국민 폭로대회’가 열려 천 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당시 시민들은 시위학생과 신민당원을 에워싸고 지켜보며 때때로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일부 40~50대의 중장년들, 60~70대의 노인들까지 합류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호응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¹⁰⁰⁾ 시위에서는 “살인, 고문 자행하는 강간정권은 물러가라”, “권인숙은 내 딸이다 강간정권 물러가라” 등의 구호가 나왔다.¹⁰¹⁾ 7월 26일, 민주화추진협의회 의 공동의장 김대중·김영삼이 권인숙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제도정치권을 망라한 광범위한 연대가 형성되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파장은 고위 공무원의 양심고백을 이끌어냈으며¹⁰²⁾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미 국무성은 「부천 성고문 사건에 유감」이라는 논평을 발표해 이러한 수감자 취급은 개탄할만하며 소름끼치는 일이라고 하면서, 한국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대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권력남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¹⁰³⁾

정부를 향한 불신은 1986년 9월 6일 『말』지의 ‘보도지침’ 폭로로 더욱 증폭되었다. 정부는 언론에 보도지침을 내려 각 신문사의 기사 모두를 검열했다. 보도지침이란 ‘가(可)·불가(不可)·절대(일체)불가’라는 지시용어들을 구사하며 보도 가능 여부는 물론 기사의 방향, 내용, 구체적인 단어까지 지시하

100) 김형배, 「성고문 성토하다 강제 사직당한 한 공직자의 양심선언」, 1986년 7월 2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101) 『고백과 행동』 3호, 1986년 7월 24일, 13쪽.

102) 김형배(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청소년대책 전문위원 3급)는 28일 오전 신민당 중앙당사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외신에만 보도되었고, ‘일체보도불가’라는 보도지침에 따라 국내언론에는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103) 주한미국공보원 공보실, 「미국무성, 부천서 사건에 유감표명」, 1986년 7월 29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는 소위 ‘가이드라인’이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 역시 보도지침의 적용대상이었다. 7월 22일에서 26일까지를 제외하고 8월 5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문제가 보도지침에 올랐다. 정부의 철저한 보도통제는 오히려 정권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을 반증했다. 7월 5일 구속되었던 여성의전화 김희선 원장의 최후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에게 범인은닉이라는 죄명을 씌운 것은) 한국여성운동탄압을 은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엮어진, 즉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이 여성단체들에 의해 사회에 확산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든 은폐시키려고 했던 치졸하게 짜여진 사건임이 드러났습니다.¹⁰⁴⁾

정부는 공권력의 성고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탄압을 일삼았으나, 오히려 여성단체들과 민주화운동 세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부천서성고문공대위가 발행한 『소식』지에는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움직임에 격려하는 시민들의 투고가 이어졌다. 『소식』 2호에는 한 주부가 변호인단에게 “검찰의 발표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발표를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보냈고, 3호에는 “저는 권양을 꼭 보고 싶고 그 장하고 장한 권양을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저도 함께 외치며 그 끔찍한 일에 대해 함께 싸우고 싶습니다.”라는 의견을 전했다.¹⁰⁵⁾ 성고문사건 폭로집회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으며,¹⁰⁶⁾ 부천서 성고문

104) 김희선, 「김희선 원장 최후진술(발췌)」, 『베를』 16호, 1986년 12월 5일, 3쪽.

105) 노태우 대통령이 월간잡지에서 대담한 부분을 들어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지나간 일’, ‘사실이든 아니든 정부가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입장이 되어 마땅한 조치도 있었으니, 그걸 꼬집는 야당이나 재야도 바람스럽지 못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독자투고도 실려 있다. (성고문 공대위, 『소식』 4, 1986년 11월 13일, 4쪽)

106) 1986년 8월 9일 충북에서 ‘충북 고문폭력 및 용공조작 저지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가 ‘성고문 및 폭력추방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달 10일 부산에서는 ‘부산민주시민협의회’ 등 5개 단체가 집회를 시도했다. 또한 11일 ‘충남민주운동협의회’ 등 3개 단체가 대전에서 성고문폭로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같은 날 광주에서도 2,000여명이 참석한 성고문폭로를 위한 특별미사가 있었다.

사건 공판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을 우려한 정부가 공판장 주변을 봉쇄하기도 했다.

부천서성고문공대위는 경찰의 폭력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군사독재체제 자체가 폭력적이고 성고문, 성폭행을 조장한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하였다. 그렇기에 1987년 4월 10일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보고 및 권양 무조건 석방 서명운동 발대회의’를 개최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운동을 지속시킬 수 있었다. 여평에서 활동했던 이미경의 인터뷰에서 부천서 성고문 사건으로 인해 독재체제에 저항하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저희가 연대했던 일반 그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남자들 사이에 섞여 갖고는, 뭐 ‘전두환 정권 물러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와 닿는 면이 굉장히 적었었어요. 근데 국가에 의해 성폭력당한, 이 부천서 성고문사건에 대해서는 여성연대를 조직해 갖고 나가서 정말 데모를 할 때, 정말 많은 여성들이, 한 번도 거리에 나와서 데모하지 않았던 여성들까지도 얘기 듣고는 나와 갖고는, ‘독재정권, 이 성폭력 정권 물러나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외치는, 그게 계기가 돼서, 유월 민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여성들 부대가 만들어져 갖고는 나갈 수 있는, 그 힘들이 생겨나게 됐죠.¹⁰⁷⁾

국가는 폭력을 독점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폭력독점은 인권적이며 민주적이고 법적인 토대 위에서 존재해야 한다.¹⁰⁸⁾ 5공화국 정부는 고문을 은폐했고, 폭력을 조장하며 유도했다. 공권력의 폭력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까지 향하자 국가권력의 존재는 더 이상 사회적 합의사항이 될 수 없었다. 여성운동은 부천서 성고문공대위의 활동으로 민주화운동세력과의 범연대를 이루었고, 변혁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했다. 이는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되었다.

107) 「이미경(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구술녹취록」, 2013년 3월 15일, 구술 아카이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108) 오동석, 「국가가 엄벌에 대처하는 법」, 『월간 복지동향』 168, 2012, 56쪽.

IV. 여성운동의 정체성과 민주화운동

1. 성폭행 문제에 대처하는 시각의 차이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여성단체와 종교계·재야 및 범민주화세력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수많은 여성피해자들이나 여성운동가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점에서 여성운동의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순결주의에 입각해 여성을 피해대상자이자 수동적 존재로만 보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만연한 사회의 양면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처음 권인숙의 변호를 맡았던 손태봉 변호사는 공문서 위조만으로는 기소 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명예가 걸려있는 만큼 성폭행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 것을 권유했다.¹⁰⁹⁾ 권인숙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인단은 변론요지에서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해맑은 연꽃처럼 오늘 이 법정을 가득히 비치고 있는 눈부신 아름다움, 그 백설 같은 순결”, “순결무구한 처녀는 이 시대의 모든 죄악과 타락과 불의를 속죄하는 제물로서 역사의 제단 앞에 스스로를 바쳤다”는 표현을 사용했다.¹¹⁰⁾ 변호인단은 고발장에서 “최고학부까지 다닌 미혼의 피해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학력주의와 미혼·기혼여성을 향한 다른 시선을 드러내기도 했다.¹¹¹⁾ 이는 민주화운동·노동운동을 하는 다른 남성들을 묘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

권인숙의 부모님 역시 성추행 사실을 숨기려 신문사에 호소문을 보내 딸의 문제를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¹¹²⁾ 정조관념은 여성

109) 박찬희,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眞相」, 198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110) 고영구·김상철·박원순·이돈명·이상수·조영래·조준희·홍성우·황인철·손태봉·황산성·이태영, 「변론요지서」, 1986년 11월 2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111) 고영구·김상철·박원순·이돈명·이상수·조영래·조준희·홍성우·황인철, 「고발장」, 1986년 7월 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112) 「동아일보」 1986년 8월 16일 6면.

을 지켜줘야 할 대상으로 묘사함으로써 여성주의에 기반 한 동력을 약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정부나 검찰은 물론, 민주화운동 단체들을 포함해 한국사회 전체가 순결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시대적 한계를 반영한 것이었다.

부천시 성고문공대위와 종교단체 역시 순결이데올로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부천시 성고문공대위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지 못할 때 다음 희생자는 바로 우리의 딸들 우리의 아내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성고문추방 기독교대책위원회도 “온 국민의 민주적제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누나와 자녀와 아내가 더 이상 이런 괴롭힘 치하고도 더러운 고문에 희생되지 않도록 한 발자욱의 물러섬도 없이 싸워나갑시다”¹¹³⁾고 이야기했다. 여성은 늘 누군가의 누나이며 누군가의 딸, 아내로만 존재한다는 관념을 드러낸 것이었다. 여성을 항상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부여를 하고,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1980년대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의 한계였다.

민주화운동 세력과 여성단체는 연대하여 성고문 문제에 저항했지만, 각 운동세력마다 시각차이가 존재하기도 했다. 이 차이는 부천시 성고문 사건 전개과정에서 면면히 드러났다. 권인숙은 최후진술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노동자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밝히며 ‘노동자’로서의 자의식을 확고하게 밝혔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의 변론 역시 권인숙이 운동권 학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현실에 용기 있게 저항하는 젊은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있었다. 또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했던 남인순은 이렇게 말했다.

113) 성고문추방 기독교대책위원회, 「광주학살 강탈정권 여성고문 강간정권 민중과 교회의 이름으로 처단하자!」, 1986년 7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인민노련 안에서의 여성문제 논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금조금 단편적으로 느꼈던 거가 권인숙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할 것인가라는 그 논의. 이제 그게 기억이 나는 거는 그 논의를 굉장히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거든요. (노동운동이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 주장은 그거였죠. 해고. 이건 해고의 문제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만 접근을 했었죠. 그러니까 노동운동 탄압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어 그렇지만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더 사실은 그런 식의 고문을 당한거다라는 것은 한 쪽에서는 저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¹¹⁴⁾

노동운동계는 여성에게 가해진 성고문이라는 맥락보다 권인숙이 해고노동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운동권 지도부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 대해 ‘개량주의자들의 싸움인데 왜 우리가 하느냐’는 입장이었고 문제제기한 사람을 개량주의자, 기회주의자로 낙인찍었다.¹¹⁵⁾ 또한 노동계에서 내놓은 부천서 성고문 사건 성명서는 아주 드물었다. 1986년 7~8월에 발표된 권인숙 사건 관련 성명서를 보면 22개 성명서 중 노동단체에서 발표한 성명서는 고작 1개뿐이었다.¹¹⁶⁾

표 1 각 주체별 성고문 사건 관련 성명서 (1986년 7~8월)

주체	진보적 여성단체	부천서 공대위	고문 공대위	민주·종교 단체 등	노동단체	합계
성명서 (건)	6	3	5	7	1	22

출처: 신상숙, 앞의 글, 116쪽 재인용.

노동운동 내부의 양가적인 관점은, 여성의 수동적인 면모만이 받아들여지

114) 「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구술녹취록」, 2015년 10월 29일, 구술아카이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1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고문·성고문 자료집: 우리들의 딸 권양』, 1987, 95쪽.

116) 신상숙, 앞의 글, 117쪽.

고 억압적 독재구조에 저항하는 여성이라는 주체적인 존재는 부정당하는 현실을 드러내었다. 여평 활동가였던 김상희의 인터뷰는 1980년대 노동운동 내에서 여성단체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를 잘 드러낸다.

우리는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으로서의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여성노동을 할 때만이 이게 지속성이 있고, 진정한 여성들의 해방이기도 하고, 또 그 운동 자체가 힘도 갖는다, 라고 보고 있었는데, 노동운동만 하는 사람들 눈에는 이걸 하나의 섹티즘(sectism, 분파주의)으로 보는 거예요. (중략) 여성노동자들이 자기주장을 안 하다가 여성문제를 제기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노동운동 내에서도 이제 싸가지 없는 여성노동자들이 생기는 거지 이게. (중략) 이런 것들이 노동운동 쪽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었다구요, 여성평우회라고 하는 존재가.¹¹⁷⁾

여성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노동운동과의 연대성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였으며, 권력에 유린당한 가녀린 여성과 여성노동자는 분리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주화운동 내부에서도 여성운동의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민청련은 기관지인 『민주화의 길』에서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 대해 생대위의 농성을 짧게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며 여성문제에 대한 소극적 관심을 드러냈다. 노동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 세력 내부에 여성비하적인 인식이 만연하였다. 여성의전화와 여성평우회 활동을 했던 이상덕은 여성운동에 뛰어들게 된 계기를 이렇게 말했다.

기독교 기관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모임이 있었어요. (중략) 나랑 여자후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의 그 성기를, 성기를 비하하는 가사를 담은, 담은 노래를 하는데, 인제 뭐 성냥공장 아가씨 뭐 그런 거, 그런 노래를 불러

117) 김상희, 앞의 구술녹취록.

서 제가 너무 불쾌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 사회운동, 기독교 운동하는 사람들 의식수준이 이렇게 여성을 비하하는, (중략) 그런데 이제 기독교 운동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걸 보고, 아 이게 운동권도 이렇게,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하고 비하하는 그런 거니까.¹¹⁸⁾

1980년대 민주화운동 내부에서도 여성을 비하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여성의전화에 걸려오는 상담 중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출신 사람이 여성을 강간한다거나, 운동권 남자들이 결혼해서 임신한 아내를 얹어놓고 패는 사례들이 있었다. 여성의전화에서 활동했던 이상덕은 여성의전화 내부에서조차 운동권 내부의 성폭행을 덮어주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화운동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폭행 사례들을 접했을 때) 아, 이게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성문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문제나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남는 것이다 그런 거를 많이 알게 됐죠.¹¹⁹⁾

민주화운동 내부의 여성문제는 이후의 여성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문제는 민주화-독재구도를 넘어 더 높은 차원의 인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전두환과 이순자 구속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순자를 비난하며 등장한 문구는 여성을 향한 멸시나 억압이 민주화 이후에 어떻게 존속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문구는 “남편이 학살을 하고 폭정을 하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못한 보초대가리 없는 여자”에 ‘부실내조죄’라는 죄명을 붙였다. 이는 아내는 남편을 내조해야 한다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냈다. 또한 “매일 저녁 9시 TV에서 패션쇼를 벌여 국민 스트레스 조장”, “주걱턱에 수술자국이 있음”이라는 문구를 통해

118) 「이상덕(한국여성의전화 부회장) 구술녹취록」, 2013년 2월 20일, 구술 아카이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119) 이상덕, 앞의 구술녹취록.

여성의 외모비하가 당연하게 통용되었다.¹²⁰⁾

여성비하가 만연했지만 내부비판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부천서 성고문공대위 위원장인 박영숙은 이 나라의 가부장제가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순결이라는 정조관념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성의 인권을 말살하는 현상을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권력이 성고문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결국 남성들이 만들어놓은 여성 억압체제의 일환이며, 권인숙의 투쟁은 여성 인간화운동의 시작으로 주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¹²¹⁾ 권인숙 역시 순종적 여성을 요구하고 여성을 꽃으로 비유하는 사회적 인식을 거부했다.

성고문 자체를 해석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여성들이 강간이니 강제추행이니 하는 정조관념을 압박하는 고문형태에 대한 반발과 저에 대한 동정심의 해석으로 이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 탄압을 위해 여성노동자에게 성적 추행을 가했다는 사실입니다.¹²²⁾

단순히 여성이 추행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할 것이 아니라 공권력이 여성에게 가할 수 있는 교묘한 폭력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관련해 김수환 추기경은 ‘민주주의 국가란 개헌·권력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존엄성의 회복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는’ 것이라고 했다.¹²³⁾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통해 드러난 각 운동세력의 시각 차이는 여성주의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는 민주주

120) 전남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반통일민족분열주의자 및 5월 학살·5공 비리의 주범 수배자 명단」, 1988년 8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121) 박영숙, 「권양! 당신은 살아있는 한국의 여성입니다」, 『베를』 16, 1986년 12월 5일, 11쪽.

122) 권인숙, 「성고문싸움은 끝나지 않았습시다」, 『말』 14, 1987, 53쪽.

123) 김수환, 「거짓과 은혜를 토대로 미래를 건설할 수 없다-여성과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과 인권회복을 위한 미사 강론」, 1986년 7월 2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의 국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2.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관계에 대한 논쟁

1980년대 여성단체들은 독재정권에 대항하며 여타 민주화운동 단체들과 폭넓은 연대를 형성했고, 여성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했다. 1984년 여대생추행사건 대책위원회부터 1985년 여조연 결성, 1986년 생대위의 결성을 통해 느슨하게 연계되었던 여성단체들은 1985년 3·8 여성대회 이후 민족민주민중 이념을 토대로 진보적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 사이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갔다. 더불어 1986년 부천시 성고문 사건으로 민주화운동 세력과 강력한 연대의식 형성했다.¹²⁴⁾

그러나 1985년 8월 7일 문교부의 학원안정법 시안 발표로 인해 여성단체 내부에서 다른 논쟁이 촉발되었다.¹²⁵⁾ 학원안정법 사태는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던 운동방향을 일치, 단결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민사회의 다양한 층위가 강제적으로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여성운동 역시 1986년 후반 여성운동이 민주화운동과 합류해 들어갈수록 여성운동에 대한 고민이 생겨났다.

결국 1980년대 중반 진보적 여성단체 내부에서는 ‘여성단체가 어떻게 민주화운동과 관계를 맺고 어느 정도까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일부는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사회 내 특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일부 구성원들은 전면적으로 민주화운동에 합류하기보다는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지키며 선택적으로 민주화운동에 동참

124) 김희선, 앞의 글, 3쪽.

125) 학원안정법은 제4조 4항과 제10조 1항에서 ‘누구든지’, ‘~행위를 한 자’로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대상을 민주화운동 운동단체들 및 일반인까지 확대시키면서 시민단체 역시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학원안정법저지투쟁위원회, 「학원안정법 시안 분석-학원안정법과 민주 개혁」, 1985년 8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하자고 주장했다.

여성운동의 특수성을 유지하며 사안별 연대에 그칠 것인지 민주화운동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것인지를 문제가 핵심이었다. 동인들의 글과 출판사업이 주를 이루는 단체였던 또문도 이러한 논쟁에 영향을 받았다. 또문은 1985년 성도부당해고사건 당시 여성연대에 지지를 표명하지 않아 내부에서 비판이 있었고 운동의 전문화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또문은 여조연과 부천서 성고문 사건 연대에 참여했지만, 모임의 성격은 적극적인 행동과 현실참여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고 변화를 통한 문화를 확산한다는 또문 나름의 조직 취지와 특성을 강조하기로 결정했다.¹²⁶⁾

여성의전화 내부에서는 자기정체성을 ‘상담소인지, 정치활동단체인지, 여성운동단체인지’ 확실히 하라는 상담원들의 요구가 단순한 여성상담소가 아니라 여성운동단체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재정립해야 하고, 따라서 민주화운동에도 가담해야 한다는 실무상근자들의 요구가 동시에 존재했다.¹²⁷⁾ 여성의전화는 1986년 김희선 원장의 구속 이후 상담사업소인지 운동단체인지를 놓고 정체성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결론의 방향은 또문과 차이가 있었다. 이현숙 이사는 내부 논쟁에 대해 여성운동과 상담 사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시각을 비판했다.

상담사업과 운동의 경중 혹은 선후를 견주는 일은 부질없는 일이다. ‘여성의전화’에서 차지하는 상담과 운동의 비중은 같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중략) ‘여성의전화’는 상담창구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반인간적 병리현상들을 배태시키는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뿌리 뽑는 운동체의 역할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당연지사 아닐까? 여성에 대한 구타와 성폭력을 묵인하고 심지어 조장까지 하는 야만적인 남성 우월주의가 타파되지 않는 한, 여성의 인간적 삶은 보

126) 『또 하나의 문화』 10호, 1986년 8월 28일; 『조옥라(한국여성학회 회장) 구술녹취록』, 2015년 8월 31일, 구술 아카이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127) 이현숙·정춘숙, 『아내구타추방운동사』, 『한국여성인권운동사』, 1999, 111쪽.

장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딸들에게 오늘의 고통을 다시 대물림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¹²⁸⁾

이러한 주장은 여성운동의 정체성이 민주화운동과 동떨어져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여성의 전화 이사장 손덕수는 “여성 대중이 고발해 온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여성의전화가 우리 사회에 뚜렷한 시각을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남녀간의 사적인 관계는 곧 정치적이라는 점, 개인 몇몇의 문제 해결로서가 아니라 구조적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그것이 곧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자체라는 점이다.”라고 지적하면서,¹²⁹⁾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은 긴밀하게 결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성의전화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면서도 자기 영역에서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키고자 1987년 9월 13일 상담기구적 조직체에서 회원중심의 능동적 운동체로의 조직개편을 꾀했으며, 같은 날 조직개편총회를 열고 전 원장 김희선, 전 이사 이현숙, YWCA 간사였던 노형희를 공동대표로 선출하였다.

두 번째는 민주화운동-여성운동의 관계논쟁 차원을 넘어선 급진적 이념논쟁이다. 1985년 3월 29일 대부분의 민주화운동 단체들을 연합한 기구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이 창설되면서 급진적인 이념논쟁이 시작되었다. 특히 여성단체 중 정치적 성격이 강했던 여평 내부에서는 독재타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방법론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내부논쟁이 절정에 이르렀다. 여평 20주년 간담회에서 이경숙(李景淑)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운동을 풀어가는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었어요. 선배 그룹은 정치투쟁을 하더라도 여성문제를 매개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고, 반면에 후배 그룹은 아니다, 군부독재타도를 내걸고 투쟁을 하면 대중은 따라오게 돼 있다

128) 이현숙, 「상담사업인가? 여성운동인가?」, 『베틀』 16호, 1986년 12월 5일, 2쪽.

129) 손덕수, 「네 둘 맞이하는 여성의전화를 돌아보며」, 『베틀』 20호, 1987년 6월 5일, 4쪽.

고 주장했어요. (중략) 우리는 여대생추행사건 같은 문제를 중요한 사건으로 보았어요. 여성문제를 매개로 해서 군사독재정권을 공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원안정법 제정 저지투쟁은 매개되는 여성문제가 없었지요. (중략) 그러면서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¹³⁰⁾

여성문제를 매개하는 것에 대한 논쟁의 결과는 1986년 6월, 3차 정기총회에서 집행부와 일부 회원들이 탈퇴하고 민청련 여성부 출신의 심복자, 조정숙, 권미혁 등을 새로운 지도부 선출로 마무리 되었다. 이는 단체의 성격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었다.

여평이 독재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반합법조직으로 변화한 이후 성명서들은 대중적 이슈보다 당시의 민주화운동권의 급진적인 구호를 내걸었다. 「여성의 이름으로 제헌의회 소집하자」, 「기만적인 헌법특위 음모에 반대한다」 등의 정치선전 활동이 진행 되었다.

조직의 변화는 합법 공개단체를 지향하고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꾀했던 여평의 근본이념에서 벗어난 것이었으며, 여평 내 일반회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었다. 여평은 선도적 정치투쟁을 하기 원했던 그룹 내에서 다시 내부논쟁을 하게 되었다. 지속적인 이념논쟁은 여평의 세력을 급속히 약화시켰다. 마침내 여평은 노동여성 지원 등을 위주로 다른 여성단체들과 연대 활동을 진행하다가 1987년 8월 해소되기에 이른다.

1980년대 중반 진보적 여성단체들에서 전개된 내부논쟁은 민주화운동 내에서 여성운동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지를 두고 벌어졌다. 1970년대 보수적 여성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진보적 여성단체에게 중요한 의제는 독자성이었다. 그리고 1980년대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여성단체를 형성하면서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이라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권력의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극대화되자 여성운동은 반

130) 이옥경 외, 앞의 글, 88쪽.

독재투쟁의 선두에 나서면서 여성운동은 민주화운동 내부에서 여성의 독자성을 재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던 것이다.

진보적 여성운동의 방향에 대한 고민은 1987년 2월 18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이우정을 회장으로, 각 부문의 부회장을 박영숙·김희선·이미경·엄영애·이영순 등으로 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창설로 귀결되었다. 여연은 “연대활동을 통하여 민주화와 여성해방 쟁취를 목적으로 하는”¹³¹⁾ 것이었다. 「전체운동 속에서의 여성운동」이라는 활동목표를 발표하며 민주화운동과 매개된 한국여성운동의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¹³²⁾ 여연의 창립멤버인 이미경과 이경숙(李景淑)은 여연을 구상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말했다.

(여평 해소 이후)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그 때의 생각이 ‘너무 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새로운 여성운동에 대한 열기를 여평이라는 개별 단체가 받아내기에는 너무 폭이 넓고 깊었기 때문에, (중략) 그 많은 요구를 받아내려고 하면은, 이 연합체가 있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여연이라는 거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연합체 안에서 소화해내야지 된다. 특히 정치적인 요구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¹³³⁾

다 개별단체들이 힘이 없는데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중략) 그런 연대 기구를 해 나가면서 한 단체가 못하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것도 필요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이슈마다 만드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항상적인 그런 연합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연합조직을 만드는 데 대신 모든 회원단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 그래서 여연을 만들었다.¹³⁴⁾

131)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 여성단체연합 회칙」, 1987년 2월 1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132) 한국여성단체연합, 「전체운동 속에서의 여성운동」, 198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133) 이미경, 앞의 구술녹취록.

134) 이경숙(李景淑), 앞의 구술녹취록.

여연은 보다 지속적인 연합체에 대한 필요성과 민주화운동 내 여성운동을 어떻게 위치시키느냐 하는 고민에서 탄생했다.¹³⁵⁾ 1984년 경찰의 여대생 성추행사건에서 1985년 여성노동자 권리투쟁, 1986년 부천시 성고문 사건을 거쳐 여연으로 이어지는 진보적 여성단체의 연대는 다음 표에서 잘 드러난다.

표 2 여성운동 단체의 연대활동 참여 현황과 한국 여성단체 연합.

여성단체	협의체	여대생추행 사건대책협 의회	한국여성대 회여성연합 생존권대책 위원회	여성단체연 합성고문대 책위원회	한국여성 단체연합
가톨릭(여성)농민회			○	○	○
또 하나의 문화			○	○	○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	○	○	○	○	○
민중불교운동연합 여성부			○	○	○
여성의진화	○	○	○	○	○
여성평우회	○	○	○	○	○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 여성위원회			○	○	○
한국가톨릭농민회 여성부			○	○	○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	○	○	○	○
주부아카데미 협의회			○	○	○
기독교여성회				○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여성부			○		○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여성부			○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				○
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협의회	○				○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여성분과					○
민족미술협의회여성분과					○
한국기독교농민총연합회 여성부					○
민족통일민중운동연합 여성위원회					○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여성선교위원회	○	○			
서울노동연합 여성부			○	○	
충북 민주화운동 협의회			○	○	
성남민주사회 발전연구회 여성분과				○	

135) 여연이 진보적 남성 사회운동 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여성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여성단체의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다. 여연의 목표와 사고방식에 한계를 느껴 보다 여성주의적 대중운동에 초점을 맞춘 한국여성민우회가 창립되기도 했다.(민경자, 앞의 책, 38쪽.)

여성사회연구회			○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여성부		○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여성위원회		○		
민주통일연합 여성부		○		
한국기독교학생 총연맹	○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여성부	○			
합계	10	19	16	21

[표 2]에서 나타나듯 3~4개 단체를 제외하고 여성단체의 연대활동에 참여한 단체들이 여연 결성에 주축이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여성운동연대에는 다양한 여성단체와 종교, 민주화운동 내 여성부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공권력의 성폭행과 여성노동자의 권리투쟁을 통한 사안별 연대의 경험은 여성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반이었다. 또한 연대의 확장은 여성문제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성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민주화진영의 한계는 성차별문제를 배제한 사회문제 개혁이 미완성된 민주화일 뿐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진보적 여성단체 내부에서 발생한 여성운동의 독자성에 관한 고민은, 1980년대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과 여성운동은 별개로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구조적 모순 속에 여성문제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1980년대 중반 진보적 여성단체의 결성과 활동, 또한 그들의 연대투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성운동의 주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V. 맺음말

한국전쟁 이후 활동한 대한부인회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의 우익 여성 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반관반민 단체로 성장했다. 특히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경우 유신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며 협소한 여성운동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1970년대 중반 군부독재에 대응하는 여성노동운동과 여성주의의 세계적인 흐름은 한국의 여성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1974년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중간집단 교육이라는 여성의 인간화에 목적을 둔 교육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중간집단 교육은 중간층 여성들의 의식향상을 목적으로 했고, 여성주의에 입각한 여성 활동가의 창출에 기여해 1980년대 진보적 여성단체의 출발점이 되었다.

1970년대 후반 중간집단 교육이 활성화되고 여성의 고등교육이 증가하자, 1980년대 중반부터 독재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 여성주의를 토대로 한 단체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983년 6월 여성의전화, 여성평우회 등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여성단체가 설립되었다. 1984년 민청련 여성부 신설은 민주화운동세력 내부에도 여성분과가 만들어질 정도로 여성운동이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중반 동시다발적으로 창설된 여성단체들은 이전과는 다른 차별지점을 내세우며 ‘진보적 여성단체’라는 흐름을 만들었다.

각 여성단체가 내세우는 사업 및 운영방안은 상이했지만 공통적으로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여성문제 쟁점화, 가부장제에 내재되어 있는 여성차별 기제를 극복하는데 활동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러한 측면은 여성운동 단체 사이의, 나아가 민주화운동 단체와의 연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적 여성단체들의 첫 연대는 1984년 경찰에 의한 여대생 성추행 사건의 대응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건당사자의 폭로와 성추행사건 대책협의회의 투쟁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행을 문제와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사회적으로 쟁점화 했다. 경찰의 성추행사건을 통해 여성단체들은 연합체를 경험하고 연대감을 형성하며 민주화운동에 기여하였다.

1985년 4월 이경숙 사건과 6월 성도섬유 노동자해고사건이 발생하자 여성단체들은 직장 내 여성차별 문제에 대중적인 방식의 운동을 도입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며 고용상의 성차별 투쟁 역시 두드러지게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10개 여성단체, 17개 대학여학생연합으로 조직된 성도노동자복지위는 대중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불매운동이라는 방식으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5세 여성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여성단체협의회를 조직하고 여성의 가사임금에 관한 논의를 확장시켰다. 여성단체는 여성의 정년이 55세라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기층여성은 물론 중산층여성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고, 1986년 3월 한국여성대회 여성연합 생존권대책위원회라는 범여성단체 연대를 형성했다.

본격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낸 여성연대는 1986년 6월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발생하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국가가 여성에게 성고문이라는 수단을 행사한 사건이었다. 생존권대책위원회는 제일 먼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사정권 퇴진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성폭력에 항의·비판하는 차원을 넘어 정권퇴진운동으로까지 나아갔다. 23개 여성단체, 여성분과 연합체인 여연 성고문대책위가 조직되었고 뒤이어 종교계를 망라한 부천서 성고문공대위가 결성되었다. 같은 해 7월, 검찰의 불확실한 수사발표는 재야세력과 야당까지 군사정권을 비판하게 만들었고 성고문사건 폭로집회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여대생추행사건 대책협의회, 여성생존권대책위원회, 부천서 성고문공대위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여성단체가 민주화운동의 적극적인 주체로 자리

매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진보적 여성단체는 여성주의 운동을 통해 독재체제의 불합리성과 비도덕성을 폭로하였다. 이는 시민들을 거리로 이끌어내는 동력이었고, 전두환 정권의 붕괴에 일조하면서 민주화를 이루어내는데 기여했다. 또한 진보적 여성운동은 독재체제에 저항하는 방식이 정치투쟁과 학생운동 등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독재타도라는 대의 아래 여성문제를 포함시킴으로써 민주화의 스펙트럼을 넓혔던 것이다.

1970년대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여성운동의 고민은 1980년대 진보적 여성단체의 설립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여성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성운동의 특성과 독자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여성단체는 물론 민주화운동 내 여성분과에서도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이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 논쟁이 발생하였다. 진보적 여성단체의 일부는 독재타도 구호아래 적극적으로 연대하였으며, 일부는 방법의 차이로 내부논쟁이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 못해 해소되었다.

1980년대 중반 진보적 여성단체의 연대활동은 비록 뚜렷하게 여성주의를 내세우진 않았으나 이를 토대로 사회현상을 해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서구의 여성주의가 여성 개인의 주체성과 정치영역 확보에 중점을 뒀던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독재체제에 대립하고 저항하는 과정을 거치며 다른 맥락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사안별로 여성문제에 대응하였지만, 국가가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 쟁점화 되면서 독재체제와 여성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여성문제는 민주화운동 내부에서도 존재했다. 1980년대 중반 민주화운동 세력은 공권력의 폭력을 비판하며 순결이데올로기를 강조했고, 여성비하적인 인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가부장제에 내제되어 있는 여성 억압기제가 독재체제와 중첩되고 있음을 드러낸 것

이었다. 그렇기에 진보적 여성단체들은 민주화 이후 여성주의를 위한 선행적인 고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여성운동과 정치민주화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1987년 정치체도의 민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여성을 향한 성폭력이나 성차별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여성운동이 사회민주화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하면서 여성운동의 독자성과 정체성은 지켜나가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1980년대 중반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 간 연대는 궁극적으로 여성운동에 관한 논의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했다. 민주화운동 내 여성운동이 가지는 한계는 여성주의가 사회 전면에 출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으며 민주화 이후 여성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경험적 토대가 되었다.

참 고 문 헌

I. 자료

<신문·잡지·교지 및 기관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 『여성신문』

『민주화의 길』, 『이화』, 『석순』, 『해방』

『또 하나의 문화』, 『베틀』, 『여성』, 『여성평우』, 『말』

<국회회의록>

「1988년도 국정감사 제1차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 「1988년도 국정감사 제2차 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

<정부간행물·기타문건>

25세여성조기정년제철폐를위한여성단체연합회, 「25세 여성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운동」, 1985

YWCA연합회, 「‘여대생 추행사건’에 대한 건의」, 1984. 12. 10

고영구 외 8인, 「검찰발표에 대한 변호인단의 견해」, 1986. 7. 18

고영구 외 8인, 「고발장」, 1986. 7. 5

고영구 외 11인, 「변론요지서」, 1986. 11. 21

김수환, 「거짓과 은폐를 토대로 미래를 건설할 수 없다-여성과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과 인권회복을 위한 미사 강론」, 1986. 7. 21

노동부, 『여성과 취업』, 1984

박찬희, 「‘부천서 性고문사건’의 眞相」, 1987

신한민주당, 「인천사태(고문) 보고서(1차)」, 1986. 6. 13

여대생추행사건 대책협의회, 「세계 여성의 날 기념 '85 한국여성대회 보고서」, 1985

여대생추행사건 대책협의회, 「여대생 추행사건대책 경과보고」, 1984. 12

여학생연합 여학생추행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여학생 추행사건 사례보고서-폭력경찰의 여대생 및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적탄압 사례」, 1984. 11. 16

재야간담회, 「권인숙 양에게」, 1986. 7. 25

전남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반통일민족분열주의자 및 5월 학살·5공 비리의 주범 수배자 명단」, 1988. 8
 정무장관(제2)실, 『한국여성단체 활동사』, 1996.
 주한미국공보원 공보실, 「미국여성, 부천서 사건에 유감표명」, 1986. 7. 29
 크리스찬 아카데미, 「여성사회 보고」, 1978
 크리스찬 아카데미, 「중간매개집단 요원 프로그램 관련」, 1974
 학원안정법저지투쟁위원회, 「학원안정법 시안 분석-학원안정법과 민주 개헌」, 1985. 8
 한국여성단체연합, 「전체운동 속에서의 여성운동」, 1987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 여성단체연합 회칙」, 1987. 2. 18
 한국여성대회 여성연합 생존권대책위원회, 「여성에 대한 성적고문 규탄 농성: 기자회견 보도자료」, 1986. 6. 26
 한국여성대회 여성연합 생존권대책위원회, 「한국여성대회 여성연합 생존권대책위원회 발족」, 1986. 3. 8

<성명서>

경희대학교 여학생 추행사건 대책위원회, 「엔.씨.씨에서의 농성을 마치며」, 1984. 12. 3
 고려대학교 여학생회, 「학생의 날이 살인경찰의 여대생 강간의 날인가?」, 1984. 11. 8
 고영구 외, 「검찰발표에 대한 변호인단의 견해」, 1986. 7. 18
 김형배, 「성고문 성토힌다 강제 사직당한 한 공직자의 양심선언」, 1986. 7. 28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광주지부 송백회·전남대학교 총여학생회·조선대학교 총여학생회, 「여성노동운동가 허명숙양에게 자행된 문귀동 형상의 야만적 성폭력을 규탄한다」, 1986. 7. 11
 민주화운동청년연합, 「현 시국에 관한 민주여성 선언문」, 1987. 7. 11
 민주화운동청년연합, 「경찰인가! 살인마인가!-임산부까지 폭행을 해 사산시킨 폭력경찰의 만행을 규탄한다」, 1984
 부천경찰서 성고문 공동대책위원회, 「권모양에 대한 부천경찰서 형사 문귀동의 성고문을 고발한다」, 1986. 7. 5
 부천경찰서 성고문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성고문 진상 은폐하는 검찰 수사 결과를 전면거부한다」, 1986. 7. 18

부천경찰서 성고문 공동대책위원회, 「천인공노할 성 고문을 규탄한다」, 1986. 7. 11
 여대생추행사건대책협의회, 「결의문」, 1984. 12. 6
 여성단체연합 성고문대책위원회, 「부산경찰서에서 고문수단으로 여성을 강간」, 1986. 7. 12
 여성평우회, 「결혼퇴직제를 정당화시킨 사법부에 대한 우리의 주장」, 1985. 4. 27
 여학생연합 여학생추행사건 대책위원회, 「성명서」, 1984. 11. 20
 일본기독교교풍회, 「연대맺세지」, 1985. 3. 6.
 성고문추방 기독교대책위원회, 「광주학살 강탈정권 여성고문 강간정권 민중과 교회의 이름으로 처단하자!」, 1986. 7
 재서독 기독교 한인교회 여신도회 연합회, 「결의문」, 1985. 3
 최선윤, 「양심선언」, 1984. 11. 21
 한국여성대회 여성연합 생존권대책위원회, 「공개항의서」, 1986. 7. 5
 한국여성대회 여성연합 생존권대책위원회, 「여성에 대한 성적고문을 규탄한다!」, 1986. 6. 26

<구술녹취록>

「강남식 구술녹취록」, 2013. 3. 24
 「김상희 구술녹취록」, 2013. 3. 26
 「남인순 구술녹취록」, 2015. 10. 29
 「신진화 구술녹취록」, 2013. 2. 15
 「이경숙 구술녹취록」, 2013. 3. 10
 「이미경 구술녹취록」, 2013. 3. 15
 「이상덕 구술녹취록」, 2013. 2. 20
 「조옥라 구술녹취록」, 2015. 8. 31
 「한명숙 구술녹취록」, 2015. 1. 22

II. 연구성과

1. 저서

- 권인숙, 『하나의 벽을 넘어서』, 거름, 1989.
- 김원, 『여공 1970-그녀들의 反역사』, 이매진, 2006.
- 김남조 외, 『강원용과의 만남 그리고 여성운동』, 여성신문사, 1998.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월 항쟁을 기록하다 1』, 푸른나무, 2007.
- _____, 『6월 항쟁을 기록하다 2』, 푸른나무, 2007.
- _____, 『6월 항쟁을 기록하다 3』, 푸른나무, 2007.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개, 2008.
- _____, 『한국민주화운동사 2』, 돌베개, 2009.
- _____,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2010.
- 여성평우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여성평우회 발자취』, 여성평우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2003.
- 이승희, 『한국현대여성운동사』, 백산서당, 1994.
- 이옥수 편저, 『한국근세여성사화 上』, 규문각, 1985.
- _____, 『한국근세여성사화 下』, 규문각, 1985.
- 이옥지, 『한국여성노동자 운동사 1』, 한울아카데미, 2001.
- 이효재, 『한국의 여성운동-어제와 오늘』, 정우사, 1989.
- 전경옥 외, 『한국여성 정치사회사 1』,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 _____, 『한국여성 정치사회사 2』,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 _____, 『한국여성 정치사회사 3』,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 정진성 외, 『한국현대여성사』, 한울아카데미, 2004.
- 조희연, 『한국사회운동사』, 한울, 1990.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고문·성고문 자료집; 우리들의 딸 권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 한국여성단체연합, 『열린 희망, 한국여연 10년사』,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998.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한울, 1999.

2. 논문

- 강남식, 「한국의 여성, 여성운동; 한국 여성운동의 흐름과 쟁점」, 『기억과 전망』 7호, 2004.
- 곽복희, 「독자적 여학생 조직을 만들기까지」, 『여성과 사회』 6호, 1995, 19-24.
- 김영선, 「1960~70년대 여성운동의 국제화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 『현

- 상과 인식』 36, 2012.
- 김영정, 「1980년대 한국 여성운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민주화운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현정, 「여성운동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여성분과, 「80년대 여성운동자 90년대 여성운동의 전망(1)」, 『정세연구』 9, 1990.
- 박인혜, 「1980년대 한국의‘새로운’여성운동의 주체 형성 요인 연구: 크리스찬 아카데미의‘여성의 인간화’담론과 ‘여성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5호, 2009.
- 박인혜, 「‘여성인권운동’의 프레임과 주체 변화에 대한 연구 : <여성의전화>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박채복, 「한국 여성운동의 전개와 과제」, 『한·독사회과학논총』 15호, 2005.
- 서명선, 「유신체제하의 국가와 여성단체-한국여성단체협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6집, 1989.
- 신상숙, 「한국 반(反)성폭력운동의 제도화와 자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 안정희, 「전두환 정권기의 유화국면과 학원안정법 반대운동 : 야당·민주화운동 세력의 연대형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여성평우회, 「한국 여성운동의 위상」, 『이화』 41, 1987.
- 오동석, 「국가가 폭력에 대처하는 법」, 『월간 복지동향』 168, 2012.
- 윤정숙, 「‘진보적’ 여성운동의 전환을 위한 모색」, 『창작과 비평』 32, 2004.
- 이정자, 「1970년대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여성인간화 교육」, 『젠더연구』 19, 2014.
- 이재경·김선옥, 「국가와 성통제: 성관련 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9, 1993.
- 이해령,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2016.
- 장민혜, 「한국 여성주의 문화운동의 성장과 특성에 관한 연구: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장인모, 「1920年代 權友會 본부 사회주의자들의 여성운동론」, 『한국사연구』

142, 2008.

정충량·이효재, 「여성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4, 1969.

정현백, 「여성사연구의 현황과 과제-‘자리 잡기’와 ‘새 판 짜기’ 사이에서」, 『여성과 역사』 17, 2012.

정현백, 「한국의 여성운동 60년-분단과 근대성 사이에서」, 『여성과 역사』 4, 2006.

조순경·김혜숙, 「민족민주운동과 가부장제」,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8』, 한국학술진흥재단, 1995.

홍석률, 「동일방직 사건과 1970년대 여성노동자, 그리고 지식」, 『역사비평』 112, 2015.

ABSTRACT

Solidarity of Progressive Women's Organizations in the Mid-1980s

Kim, In Hye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Most of women's organizations of 1950s~60s have semi-governmental characteristic, which was subordinate to the national authority. They exerted efforts for female rights improvement, however they were thoroughly subordinate to the government, protecting dictatorship system, etc. During the mid 1970s, as feminist movement was activated globally, Korean female laborers increased, and intermediary group education of Christian Academy was progressed, a new stream also appeared in feminist movement. Particularly, this Christian Academy tried to educate the intermediary group to lead feminist movement through the education based on 'humanization of woman', and provided a foundation for a new feminist movement of 1980s to emerge.

When Chun Doo-hwan's government adopted an appeasement policy in 1983, civil movement and democratization movement were activated. Also, organizations regularly asserted feminism. In 1983, 'Korea Women's Hotline', 'Women's Association for Equality' were founded consecutively, and 'Women's Department of Youth Association for Democratic

Movement' was newly established in 1984. They had independence from national authority, and aimed for a legal organization as a continuous public feminist movement.

Sexual violence frequently occurred under the dictatorial regime during 1980s, however response to this was insignificant. When a sexual molestation case on a female university student occurred by a police officer in 1984, female university student council of each school announced condemn statement, here feminist organizations joined and responded to sexual violence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 in solidarity. A progressive feminist association, 'Female university student molestation case council', did not achieve a remarkable output, nevertheless, it became a starting point of female solidarity.

Progressive feminist organizations needed to acquire support of the middle class women as well as the basic class women for continuous public feminist movement. Seongdo Textile dismissal case in 1985 succeeded in the method of a boycott where the consumers directly participated. Female early retirement problem of the same year, which became a social issue, improved gender inequality of workplace that was prevalent in the society. Feminist organizations which banded together in both cases intended to continuously resist against the sexual discrimination system through starting 'Women's rights for living council' by agreeing to the point that acquisition of female right of labor was the preferential task.

Bucheon sexual torture case in 1986 becam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form solidarity of progressive feminist organizations. Gwon Insook's

exposure completely tore down the legitimacy of governmental authority. Female organizations which already had the experience of solidarity quickly responded to this case, and became the key axis to form the solidarity of pan-democratization movement power, called 'Bucheon police station sexual torture council' including democratization power, activist group out of power, and the religious world.

Feminist movement naturally joined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e process of resisting against the sexual violence of governmental authority. However, controversy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feminist movement arose while adopting Educational Institute Stabilization act in 1985. Progressive feminist organizations, established asserting the independence of feminist movement from the nation, were concerned regarding how to keep the identity of feminist movement.

Disputes progressed in the inside of progressive feminist organizations were how to manage the relations between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feminist movement. This became a motive to promote the fundamental problem of 'democratization based on feminism'. Discussion on feminist organizations and the continuous experience of solidarity concluded the birth of a progressive feminist organization alliance,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in February, 1987, which influenced determination of direction of feminist movement since democratization.